



# 너나없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일

- 이 재 천(전주시의회의원)

새 천년이 오는가? 새 천년을 준비하는가? 새 천년의 비전은 무엇인가?

인간이 하루를 살아 인생을 이루는 것을 보면, 십 년이 가든 백 년이 가든 하루의 일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섭리와 숨결을 느낄라치면 새 천년을 맞는 오늘까지가 단 한순간의 순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면서 또 인간의 하루를 보면, 생로병사와 오욕철정의 마음춤의 고통이 마치 영원의 무게에 버금가기도 한다.

이러한 사념 속에서 새 천년은 한 번의 숨, 하루의 변화처럼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쟁기고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 동안의 서원(誓願)이 풀리는 새날의 시작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정신의 변화를 참으로 경이롭게 바라보는 때가 있다. 그 때야말로 인류의 진보를 다시 확인하는 때이며, 존재의 기쁨이 넘쳐나는 때이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과 이성의 정신이 억압과 권위와 차별의 세상에서, 썩트고 싸우고 쓰러지다가 다시 커지고 승리하는 그 온갖 과정에서이다. 시와 노래와 소설 속에서 작은 한 영혼의 투쟁을 보면서 그렇고, 역사와 이 시대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투쟁과 희생을 보면서 그 모든 순간에 전율과 긴장과 희열과 에너지가 얻는다.

그 정신 덕분에 우리가 인간인 줄 아는 것 아닌가. 그 정신의 힘으로 인간이 조금씩 완결되어온 것 아닌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이 지극히 평등한 눈으로 세상을 사는 장애없는 영혼의 시대를 열어야 할 자 함이 아닌가.

여자와 가난한 사람들과 직업이 비천한 사람들, 병자들과 소경, 절름발이, 귀신들린 자... 이들에게 인간의 권위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깨우쳐 준 예수가 그때 그 첫 천년의 시작에 있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인다. 예수의 평등과 박애의 사상이 인류

## 약자와 장애우들이 소외와 불편을 당하지 않는 사회로 제도를 다시 세우는 데 함께 하는 일

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의 억압을 이기는 순교의 정신이 되고, 2천 년을 흘러 온갖 독단과 권위에 저항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본다. 아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새 천년을 준비한다. 공무원들, 직장인들, 가정과 사회가 다 새 천년을 맞이할 것이다. 얼핏보면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새 천년은 축제가 전부이다. '99 마지막 날 해거름에서부터 '00 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대의 '밀레니엄 축제'를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예외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축제가 끝나면 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이전 사업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변화나 큰 흔들림이 없이 예전처럼 이리저리 구르듯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국정에 있어서나 지방 정책에 있어서 아주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90년 대 들어 제도미련에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복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수면 위로 완전히 떠서 매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

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들 분야에 대한 예산투자가 확대되어 훨씬 발전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 전문활동가들의 입장이다.)

이천 년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이 분야들은 어쩌면 인간성 회복의 최후의 단계라고도 생각한다. 이렇게 되까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을 리드할 수 있게끔 한 자기희생의 투지와 연구노력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을 받고, 자유로운 세상, 평등하고 공동체적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조금씩 조금씩 색칠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평등세상, 너나없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시민단체가 전주 사람들의 힘을 모아 발족한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유일한 장애인 권익단체로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기타 복지 정책을 이끌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지부가 대구 부산에 이어 전주에 세워진다. 전북지부는 지난 연초 시의회의 사회복지수용시설조사특별위원회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계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수개월 준비 끝에 창립하게 된다. 시민단체운영과 활동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많지만, 장애우 권익과 복지운동은 인간의 선성을 일깨우고 함께 하고 싶은 좋은 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임을 깨닫는다. 너나없이 하고 싶은 좋은 일, 그것은 마음의 차별을 없애고, 권위의 장벽을 허물고, 약자와 장애우들이 소외와 불편을 당하지 않는 사회로 제도를 다시 세우는 데 함께 하는 일이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75 호

1999년 12월 7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경찰, 집회신고때 각서 요구 강한 항의받고 "강요 아니다" 뒷말

경찰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각서를 따로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각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집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전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이 초법적으로 요구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각서 2쪽에).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창석씨는 "지난 3일 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전주중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정보과 형사로부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관이 그 동안 집회신고자들이 서명한 각서꾸러미를 내보이면서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집회신고서 접수증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집회명칭과 시위방법 등 모두 15개 항목을 적도록 하는 옥외집회신고서, 시위방법을 기재하는 별지, 그리고 참가예정단체와 참가인원수를 기재하는 또 다른 별지를 적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내규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서는 △폴리스라인(Police Line)을 절대 넘지 않겠다 △준법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등 모두 9개 항목의 '약속'과 함께 단체명과 대표자 이름 등을 적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각서는 집시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규에도 그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감금실 변호사는 "법적인 근거

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중부경찰서 정보과의 한 경찰관은 "각서는 지난 98년부터 받아왔지만 계몽차원일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의 항의성 문의가 계속되자 경찰 관계자는 각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시인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문만식 사무국장은 "경찰의 불법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서 거부하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국보법 사실상 현상유지 전북연대회의, "개정추진 기만적"

김대중대통령이 4일 "국가보안법의 정부참정 부분 삭제와 고무·찬양적의 적용대상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상임대표 리수현 신부 등 3명)가 반대 논평을 냈다.

전북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국내의 인권단체가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제7조(고문·찬양등)의 핵심적인 항목들을 그대로 두고 국보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반민주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북연대회의는 "김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두고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잠시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가운 감옥에서 19년 15년씩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두 양심수

손성모 (711-830) 대구시 화원우체국 사서함 1호. 수번 자 3100  
신광수 (500-704) 광주시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수번 5103

### 【 행사와 동정 】

- ▶ 실업예산 삭감 반대 행동 ..... ■ 12월 9일 오전 11:30/국민회의도지부
- ▶ 국보법 철폐! 30차 옥외집회... ■ 12월 9일 오후 4:30/전주코아백화점
- ▶ 민주노총전북본부 대의원대회 ... ■ 12월 10일 오후 3:00/전주목원취폐
- ▶ 교육운동본부 발족식 ..... ■ 12월 11일 오후 3:00/전교조전북지부
-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개소식 ■ 12월 11일 오후 3:30/중소기업은행
- ▶ 전북민사협 송년문화한마당 ..... ■ 12월 11일 오후 6:00/전북대 녹지원

# “WTO가 가난한 사람 만든다”

## 민중연대회의, WTO 뉴라운드 중단 촉구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단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일 성명을 내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WTO에 반대하는 10만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시위대를 폭력진압한 미국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뉴라운드 협상이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생물다양성협정 등의 국제조약을 존중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전세계적으로 빈곤을 확산시키고 국가간 불평등과 전세계 민중의 빈곤을 부추기고 있는 WTO 뉴라운드 협상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개혁 ‘전북운동본부’ 발족

## 전교조전북지부 등 17개 단체 가입

최근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신자유주의 기조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정책마저 경제논리로 치닫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다.

시민운동연합, 전교조전북지부 등 도내 17개 사회단체는 오는 11일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전북교육운동본부)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전교조전북지부 차상철 지부장은 “과밀학급과 거대학교 해소, 학교 표준 운영비 확보, 학교환경개선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교육예산은 97년부터 계속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의 경제논리 위주의 교육정책을 막아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싸울 필요를 느꼈다”며 도민운동본부 결성취지를 설명했다.

전북교육운동본부는 교육개혁의 시금석이 될 GNP 6% 교육재정 확보와 국립대 민영화 방침 철회 BK21 정책 철회 경쟁원리 강화에 의한 교원 정책 도입되지 농촌교육정상화를 위한 농촌교육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한 도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교육개혁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학급당 교사수가 감소되고 있고 도시학교의 ‘콩나물’ 교실과 농어촌 학교 폐쇄 BK21 정책 등 교육현장이 거꾸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1쪽 관련자료)

# 각서

0. 단체명 : 0. 대표자 성명 :  
0. 생년월일 : 0. 행사명 : 0. 집회일시, 장소 :

본인은 이와같이 신고한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떠한 법의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가. 신고된 단체이외에 다른 단체회원등이 참가하여 집회가 변질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어떠한 형태의 신고이외의 집회도 개최하지 않겠습니다.

나. 철봉(쇠파이프), 돌, 화염병등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나 물건을 휴대, 운반, 소지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고 회수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중략)

마. 주최측에서 현장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집회 전후 및 집회과정을 통해 경찰업무에 협조하겠습니다.

아. 각서에 기재된 사항외에도 금번 집회가 법에 규정된 대로 준법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최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Police line을 훼손하거나 절대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1999 . . . . .

위 각서인 인

전 주 중 부 경 찰 서 장 귀 하

#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아래 계좌로 5천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입금해 주시면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께서는 <평화와인권>을 보내드리고 단체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필요로 하실 경우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국보법 개정’ 시늉만

## 김대통령, 본질적 개정의지 안보여

지난 4일 김대통령이 표명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언급이 예초 국민회의안에서 한치도 나아간 것이 없이 “우리 실정에 맞게”라는 표현으로 보안법의 문제조항(본질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4일 국회상임위장 등과의 오찬에서 “외국에서는 고무·찬양 조항(7조)을 모두 없애라고 하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어렵다”고 말함에 따라 여론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방향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론의 개정안은 찬양고무죄의 규정에서 개인적인 찬양고무 발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과 ‘조직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에 처벌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적단체를 구성해 선전·선동 행위에 나설 경우’로 바꾸고, 5항인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항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철폐전북연대회의의 김승환 공동대표는 “여권의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현행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개정안은 현행법처럼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데 악용되기에 어떤 걸림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이창조씨는 “이적표현물 처벌조항을 없앤다고 하나 이마저 ‘선전·선동’의 항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여전히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개정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세계 인권단체에서 악법으로 낙인찍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구속자 중 93%가 7조 위반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죄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7조 3항이라 볼 수 있는데 3항을 비켜간 이번 개정안은 본질적 내용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시민사회의 압력에 못이긴 ‘시늉내기’로 평가받고 있다.

# “실업자에는 사형선고”

## ‘정부 실업예산삭감’ 반대 시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면서 정작 국민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실업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 실업자와 실업·노동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업예산삭감반대 전북시민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와 민주노총 고용지원센터, 장애인 실업자단체 등 6개 실업관련단체 회원 2000여명은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정부 실업예산삭감 반대를 위한 실업단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회를 준비한 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의 이창석 사무국장은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이 왜 우리 노동자, 민중에겐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가 문제다”면서 “생산에서 소외된 실업자들을 분배의 과정에서조차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1년에 280일을 넘게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실업과 임금삭감을 강요하면서 고작 60일 일하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연의 임무를 잊고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 관악주민연대의 신장식 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말 그대로 생산과 발전의 주역이었던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라는 법인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사회복지예산을 포함한 실업예산삭감에 대해 더 이상 보고 있지만 말고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 실업자 한 명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나도 가족이 있고 이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절규하며 장애인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업이 장기화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1000만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실업예산삭감은 실업자들에 대한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오는 13일 상정될 실업예산 삭감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실업예산삭감반대 전북비상연대회의는 오는 7일과 9일 국회의원회 전북도지부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계속해서 삭감안 철회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 학살 진상 규명 등 촉구

## 지난달 동아시아 학술심포지움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심포지움’이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심포지움은 한국과 일본, 대만 세 나라의 학자 등이 참여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29일 폐막과 함께 채택된 결의문은 한국 현대사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과 제주도 4·3항쟁을 비롯해 한국에서 저지른 모든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미국정부가 밝히고 사과·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경고 △한국의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섭을 비롯한 130여 명의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 황당한 경험, 집회신고에서 '각서'까지!

- 이 창 석(전주실업자취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지난 12월 3일에 전주중부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왕이면 합법적으로 별 시비 없이 집회를 하면 되겠다는 마음에서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집회가 정부의 실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항의성 집회이기 때문에 크게 불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또한 집회 신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 빠른 시간내 집회 신고를 마무리하고자 사전 지식까지 가지고 갔다.

## 각서쓰기를 거부한 사연

하지만 경찰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무려 1시간이나 계속됐다. 처음부터 10분 정도를 기다리게 하더니 정보과 형사들이 두 명이 민원실에 내려와 집회 신고 서류를 내놓고 이것저것 묻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묻는 것이겠지 하고 불쾌하지만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었다. 집회 신고하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던지 속으론 이런 행정절차도 빨리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점점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전북민중연대 회의가 무슨 단체인지 알아야 집회 신고를 받아 줄 것이 아니냐는 반문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따졌고, 집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다시 반문했다. 내 얘기를 들은 형사는 곧바로 말을 바꾸고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집회 신고서를 작성하고 난 뒤 집회 형태, 시위 방법 등이 적힌 문서로 계속 작성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다. 문서 제목이 '각서'다. '각서'를 쓰라는 것이다. 나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다. '각서'가 가지

고 있는 속뜻이 뭔가? 이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강요의 문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각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쓰는 일종의 불평등 용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경찰이 제시하는 '각서'를 쓸 수 없다고 했다. 그 내용이 평화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쓰여져 있는지 간에 나는 일단 이 '각서'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단호히 '각서 쓰기'를 거부했고, 결국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은 "누구나 다 쓰는데 왜 당신만 쓰지 않겠다고 하는가, 이 각서를 쓰지 않으면 집회 신고 접수를 받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로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었다. 전형적인 수법이란 아니든 간에 정보과 형사들은 "이 각서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난처해진다"는 등의 말로 나는 하는 수 없이 '각서'를 쓰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졌다. 경찰들도 내심 걱정스러운지 자꾸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을 해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도저히 그냥 돌아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12월 9일 집회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이 괴물 문서인 '각서'를 이번에는 쓰지 않고 오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꾸 만류하며 "다음에 와서 집회 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기필코 신고를 하고 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이 내려와서 대뜸 한다는 말이 "새천년도 오는데 집회 좀 그만 합시다" 한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집회 신고서를 달라고 하고, 동행한 동료와 집회 신고를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미 신고된 서류에 날짜만 쓰자는 제안이다. 이러저러한 집시법에 관련한 이야기를 주섬주섬 하고는 매우 불쾌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각서'

라는 문서에 대해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것이라고 하고 일단 집회 신고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딱히 행동할 여지가 없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의뢰하게 되었고, 여기서 기꺼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 주었다. 그리고 난 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도 전화가 왔다. 이러저러한 얘기 뒤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확인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경찰에서 시치미를 뚝 떼더라. 순간 더 화가 나서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각서'를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게 되었고, 결국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문서 이름은 '각서', 문서의 참뜻이 '잘못하면 알아서 하라'는 협박만 남긴 채 상처뿐인 투쟁을 하고 나온 것이다.

## 이 참에 썩기를 박자

경찰의 행정 관료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집회 신고를 내는데 '각서'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각서'를 쓰고 나왔다는 점이 더 서글웠다. 우리 사회 단체가 과연 이런 문제점을 보면서 왜 그냥 지나가고 말았을까? 혹시 누구나 쓰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행정관료주의에 동의해 버린 것은 아닌가하고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 권리는 행정 위주로 지켜지지 않는다. 나는 당장 집회 신고서에서 이 '각서'라는 문서 자체를 거부하자고 제안한다. 모든 곳에서 집회 신고를 내는데 이 '각서'만큼은 작성하기를 거부한다면 경찰들의 행정관료주의에 썩기를 박는 일이 아닐까? 좋게 좋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단체가 이 ' 좋게 좋게 이데올로기'에서 빠져나와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76 호

1999년 12월 14일

발행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 문규현 · 김승환  
편집인 : 문민식

· 주소) [560-040]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 전화) 0652-231-9331 · 팩스) 0652-231-9332  
·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 E-mail : onespark@inp.or.kr ·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새 세기는 '인권의 시대'로 '인권의 날' 맞아 인권단체들 5대현안 권고

20세기 마지막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우리 사회의 인권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KNCC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9개 인권단체는 지난 9일 특별성명을 통해 21세기를 맞아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인권현안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과거의 인권침해 청산 작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가칭 진실과화해위원회를 구성해 과거 청산을 위한 작업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은 부분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현실정치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즉각적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유엔의 거듭된 권고만큼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최소한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그 첫 단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최대의 독소조항인 제7조를 완전히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연말에 과거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대대면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감옥에 남아있는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고 학생과 노동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비롯해 인권관련 법령의 제·개

정과 인권관련정책이 법무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그 취지가 변변히 왜곡되고 퇴색하는 현상을 심히 우려한다"며 대통령에게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 조언·자문할 획기적인 자문기관의 구성을 제안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인권의 날인 10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인권관련 법안들을 민주적으로 제·개정할 것을 촉구했다(성명서 4쪽).

## '전북교육운동본부' 발족

11일, 전교조 등 24개 단체 참여

'전북 교육정책확보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전북교육운동본부)가 지난 11일 오후 3시 전교조 전북지부회관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약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열악한

교육재정과 학교교육의 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학급붕괴 등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학교교육의 위기는 교육재정 투자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회피하여 가난한 학교를 만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재정의 지방재정중당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재정축소를 은폐하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최대 수혜자인 국가가 교육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교육운동본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진정한 교육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21세기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재정 GNP 6% 확보 △지방재정교부금 전액지원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재개정 △BK21 및 국립대학 민영화랑침 철폐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 국가보안법 사건 공판 안내

- 12.17(금)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9호 -  
문규현 신부(2시) · 강희남 목사(3시)

## 【 행사와 동정 】

- ▶ 국보법 폐지를 위한 목요캠페인 ■ 12. 16(목) 오후4:30/전주코아백화점
- ▶ 국보법 폐지 전북도민결의대회... ■ 12. 18(토) 오후2:00/전주코아백화점
- ▶ 제2차 개혁입법쟁취결의대회 및 민주노총탄압 규탄대회..... ■ 12. 18(토) 오후2:00/익산시청앞
- ▶ 양심수출을 위한 시와 노래 한마당 ■ 12. 19(일) 오후5:00/서울장충체육관

### 민중대회 경찰폭력 다수 부상 언론에선 “학생들끼리 서로 밀리다가”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정리하고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민과 노동자 학생 등 2만여명이 서울에서 벌인 제2차 민중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다수의 시위참가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 전농 “왜곡보도 언론 정정보도해야”

10일 오후 서울역에서 있던 민중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하던 농민과 학생들이 경찰과 충돌해 200여명이 부상당하고 61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여주농민회 소속 안영서씨(60)가 뇌출혈로 중대부속병원에 후송됐고 항공대 학생 이재희씨(23)는 등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세종대 정은숙씨(25)와 한국의국어대 윤미정씨(23)씨도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다. 이밖에도 다수의 농민들과 학생들이 을지백병원, 강남성모병원, 적십자 병원, 중대 필동병원 등지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정철효씨(서울대) 등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 1천여명이 서울역 민중대회를 마치고 동국대에서 정리집회를 열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전경 등 무장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마구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윤씨 등은 유일한 퇴로인 좁은 골목길로 학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쓰러져 중상을 입었다.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듯이 ‘학생들끼리 서로 밀리다가 깔려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 “국회가 잠을 자니...”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장 정광훈)은 “정부는 대선공약을 한 가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 잘못으로 파산하고 절규하는 농민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과 연행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전농은 이어 “KBS, MBC, SBS 등 방송3사가 민중대회위원회의 정신과 기조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생사를 건 2만여 농민들의 요구를 보도하지 않았다”며 해당 언론사에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1일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애꿎은 전경과 민중들만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가 잠을 자니 민중들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 서로 충돌해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농 정광훈 의장을 비롯한 농민단체 지도자들은 10일 밤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연행자 석방, 폭력사태 책임자 사과 등 이날 시위와 관련된 요구와 농가부채 해결 및 뉴라운드협상 참가 유보 등 애초 요구안의 관철을 위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전농은 13일부터는 명동성당에서 ‘농가부채해결과 농민 4대 개혁입법 쟁취, 폭력진압 규탄을 위한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 울산에도 민가협 생겨

양심수 석방 - 수배해제 활동 벌이기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 등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상임의장 임기란) 운동이 울산에서도 시작됐다.

울산 민가협(회장 이순자)은 지난 8일 오후 울산 근로청 소년복지회관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울산 민가협은 창립선언문에서 “양심수의 고통은 단지 양심수 자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아니며 이 사회의 억압과 착취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라며 “양심수 가족을 비롯해 구속·수배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가족들이 슬픔에 짓눌리지 않고 결연히 일어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울산대 총여학생회장이던 딸 손혜연씨를 감옥에 보낸 이순자 회장은 대회사에서 “민가협 활동을 준비하고 나서부터 딸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기분”이라며 “민가협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앉아 가슴만 태우는 못난 부모가 아니다”고 창립 소감을 밝혔다.

#### 차가운 감옥에서

19년 15년씩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두

#### 양심수

손성모 (수번 자 3100)  
(711-830) 대구시 화원우체국 사서함 1호.  
신광수 (수번 5103)  
(500-704) 광주시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아래 계좌로 5천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입금해 주시면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께는 <평화와인권>을 보내드리고 단체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필요로 하실 경우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문의: 0652-231-9331 / 예금주 문규현  
후원계좌 ·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한국통신, 노조선거 개입의혹

‘추천하지 말라’ 등 민주후보쪽 방해

한국통신 전북지방본부의 노동조합선거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는 15일 치루어지는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전국 위원장과 지방본부 위원장, 그리고 광역지부장 선거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정보통신과 에너지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유일한 조직을 선출하는 선거여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통신 노조 선거가 한국 노동자운동, 특히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익에 대한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 전북본부의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한국통신 전북본부 사측은 △노조선거 광고 이전에는 지방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체육대회나 각 사원모임 간담회, 수련회 등에 각종 물품과 금품을 지원하며 사측과 화합할 수 있는 후보를 부탁한 바 있고 △남원지역에서는 모후보 진영을 추천해 준 조합원들을 해당 국장실로 불러 ‘공개적인 추천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면담을 했고 △정읍지역에서는 중앙후보 1번 이규만 후보연설을 업무 방해라며 지지하는가 하면 △익산지역에서는 각 실장 등 10여명이 나와 아첨인사를 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지역 외에 경기 인천지역의 한국통신 노조선거에서도 사측이 공공연하게 노조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측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 영수증으로 남아있는 것을 물증으로 확보해 현재 한국통신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신분을 밝히길 꺼려 의혹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사측이 개입하고 그

개입에 의해 사측이 지지 지원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노조는 자주성을 지킬 수 없다. 특히 선거개입을 위한 사측의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 공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전북본부 간부들의 관공비용이나 기밀비 등의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에 사측이 개입하고 있다면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한국통신이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고 한국통신 사측에 경고했다.

#### 전북대, 아전인수식 ‘단협해지권’ 해석

전북대 노조, 5개월째 파업

전북대학교 대학본부가 지난 96년 김영삼 정권말기에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중 단협해지권(단협) 해지권을 약용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 노동자 단결권 보호조항

단협해지권은 오랜 기간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아 단협내용 자체가 사문화될 때 이를 해지하고 새로이 단체협약을 맺으라는 취지에서 신설된 법조항이다. 이는 본래 단협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측에 대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북대학교 노동조합 유수만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윤희환 사무국장이 지난 3월 30일 기성회 직원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우리 학교는 기성회비를 깨끗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없고 전임자도 필요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체력단련비 120% 삭감을 발

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대학측과 단체협약을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학측은 이에 앞선 2월 2일 이미 노동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신청한 상태였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단협안을 만들지 못하면 단협 자체가 해지되고 마는 상황이 되었다. 2월과 3월 두 달 동안 대학측은 노조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들고 나와 노조와 실감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3월 30일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이같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안과 전임자를 없앤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17일 노동자들은 체력단련비가 깎인 월급봉투를 받게 되었고 이어 6개월이 지난 8월 5일 대학측은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던 유수만 위원장에게 원직복직 발령을 냈다.

노조측은 “단협과도 상관없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대해 노조나 개인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반대한다”며 4월 19일부터 노조사무실에서 간부농성을 진행한 데 이어 전임자 원직복직 발령을 낸 8월 5일부터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학측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자 노조는 11월 25일부터 대학본부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 “명백한 노조와해 공작”

유수만 위원장은 “이번 대학측의 단협해지는 노동조합을 깨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측이 노동조합비 원천징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조합사무실을 일방적으로 옮기라고 통보했다가 철회한 것 등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또한 대학측은 유위원장을 원직복직 발령하고 9월부터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짐계나 해고가 아닌 상황에서 자행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전북대학교측은 노동부로부터 판결받은 바 있는 ‘부당노동행위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성의 전당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로는 만기지 않는 몰상식한 일이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4쪽에 이어짐>

<성명서> 세계인권선언 제51주년을 맞이하며

### 전쟁과 억압이 종식되는 미래를 위해

1. 1948년 12월 10일 UN은 국제적인 살인행위였던 제2차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의 국제적인 살인행위를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했다. 자국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지도자는 언제든지 국제적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가 최소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자각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출발했다.

2. UN은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뒤 51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을 묵과하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UN은 인권의 영역에 있어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만 강제적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영역도 모든 나라가 이를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제적 규정으로 정하여 전쟁과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민중들의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1948년 UN에서 세계인권선언문 작성을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일 즈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되어 오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12월 1일 제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승만 독재정권은 집권을 연장했으며, 박정희 전두환 등도 그의 뒤를 이었다.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면서 집권을 유지했던 이와 같은 역사의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한편 한국의 민중들은 인권 억압의 역사 속의 피해당사자였던 김대중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며 과거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던 대통령들과는 다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된 지금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4.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1년 동안 1999년만큼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분출한 적이 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양식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력적 테러를 정당화해온, 원초적으로 법이기를 포기한 법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만 국가보안법 개정을 되풀이 뿐 본질적인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고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5.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보상법,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교육관계법 제개정, 통합의료보험법 및 약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제·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당리당략에만 치우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진정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에 약간이라도 접근하고자 한다면 위 인권관련법안들을 반드시 민주적으로 제·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전쟁과 학살, 소수의 탐욕과 억압의 지난 세기를 돌아본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인권존중 정신을 되새기며 전쟁과 억압이 종식되는 미래를 위해 중단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1999. 12. 10.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대 (-3쪽에서 이어짐)

처음에는 어느 편에도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던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측도 대학측의 상식을 초월한 노조탄압에 손을 저으며 지난 9일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소열 총학생회장은 "대학측이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앞으로 노조와 학생대표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구성해 대학측을 압박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부당한 임금삭감 철회, 단협 원상복귀,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매일 12시 점심집회를 갖고 있다.

### 민노총 익산역 천막농성

18일 국회폐회까지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등 요구

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가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13일부터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오는 18일까지 6일 예정으로 익산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농성을 끝마치는 18일 오후 2시에는 '개혁입법 촉구 및 민주노총 탄압 규탄대회'를 익산역 앞에서 가질 계획이다.

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노동시간 단축특별법 등 10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와 △공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 해고자 복직 등 3대 요구를 내걸고 국회 앞과 전국 각지에서 국회폐회 때까지 감도높은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은 "김대중 정부와 국회는 돈로비와 검은 범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농성장 침탈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개혁입법과 3대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본격적인 정권퇴진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평화와인권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제 177 호

1999년 12월 21일

발행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행인: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문만식

·주소 [560-040]전주시 원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전화) 0652-231-9331 ·팩스) 0652-231-9332  
·통신ID) onespark(천.나.녹두넷.진보넷) ·E-mail : onespark@inp.or.kr ·Homepage : http://inp.or.kr/onespark

## 2000년에 주5일 근무를

### 민주노총 개혁입법 처리 촉구

'새벽별 보고 나가 새벽별 보고 들어오는 생활, 가정을 위해 직장이 존재하는지, 직장을 위해 가정이 존재하는지, 혼돈스럽지만 한 봉급쟁이들, 해결책은 노동시간 단축밖에 없다. 노동시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인간답게 한 번 살아보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와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8일 전주교아백화점에 모여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을 위시한 개혁입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울들어 가장 추웠던 이날 눈이 오는 가운데에도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보수 기득권층의 눈치만 보느라 노동자민중이 원하는 개혁입법을 외면하는 국회를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의 단초가 될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국민의 도지부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한국 노동시간 세계 최고수준

노동자들은 국민의 도지부 앞에서 결의문을 통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10대 개혁입법 처리 ▲공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철회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현재 일인당 주 45.9시간, 연 2천 3백 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 가

장 길고 아시아·아프리카 등 후진국과 비교해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길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미 지난 1935년부터 주40시간 노동제 조약을 채택해 노동시간 단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주35시간 노동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했고 독일금속 노동자들은 이미 96년부터 주35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여 실업악화를 막고 있다.

### 인권법 연기될 듯

#### 정책위 의장 공대위에 답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될 인권법 제정이 2000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입법정 정책위 의장이 인권위원회의 성

격을 둘러싸고 재야 및 시민단체와 여론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법안통과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입법정 의장은 "인권단체나 법무부 양측 가운데 한쪽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현재 상태에서 법안제정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좀더 조율을 거친 뒤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최근 청와대 등을 중심으로 잇단 당정회의를 열고 인권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독립적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정부측(법무부)이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자여러분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평화와인권>을 사랑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다음호는 2000년 1월 4일

발행합니다.

### 【 행사와 동정 】

- ▶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설명회
- ▶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대회.....
- ▶ 국보법 폐지 31차 목요결핵인 ...
- ▶ 경찰 존안카드 및 전주교도소 의사 행정소송 판결 .....
- 12. 22 (수) 오후2시/군산개정병원
- 12. 23 (목) 오후2시/근로복지공단
- 12. 23 (목) 오후4:30/전주교도아
- 12. 28 (화) 오후2시/전주지방법원

# <평화와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뉴스

## 노동자들 공안탄압 맞서 연대투쟁 투쟁사업장 연대회의 조직 - 1월

IMF분위기를 타고 벌어졌던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노동탄압에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으로 대항했다. 적게는 2백일에서 많게는 4백일이 넘는 시간동안 줄기차게 싸워왔던 사업장들이 자본과 권력의 'IMF 극복-노동자 희생'이라는 논리에 밀려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자 전북노동자들은 '투쟁사업장 연대회의'를 만들기에 이른다. 지난 1월 군산기아특수강 해고자, 군산대학교 노동조합, 군산지역 카케리어 노동조합 등 5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연대회의를 만들어 5개 사업장의 문제를 요구 사항으로 잡고 1년 가까운 연대투쟁을 벌였다. 연대투쟁의 결과 3개 사업장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고 두 개 사업장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를 계기로 이후 노동탄압이 시작된 군산개정병원, 현대자동차판매전북본부, 전북대학교 노동조합, 삼신교동, 새한택시 등 투쟁사업장도 연대회의를 구성해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 총기남용 등 경찰폭력 만성적 '인권보장위' 설치 의미 훼손

전북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울초 청 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인권 보장 노력을 비롯기라도 하듯 경찰관들의 총기남용과 폭력진압, 각종 비리들이 잇따랐다. 지난 1월 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절도용의자에게 실탄을 쏘 중상을 입힌 사건을 시작으로, 2월에는 '군산지역 카케리어 노조' 노동자 장성민씨가 경찰의 집단폭행으로 실명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4월에는 역시 파출소 순경이 정복근무중에 자기 형의 채권자를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8월에는 군산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석방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고 팔이 꺾인 채 인권보장관실 현판이 걸린 경찰서 복도로 끌려들어가기도 했다. 실제로 인권보장위원회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간판을 내렸다.

## 손성모 신광수씨 끝내 석방 안돼 준법사약제 여전히 사면 조건으로 - 2월

각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손성모(71세·19년 복역), 신광수(71세·15년 복역) 두 비전향장기수는 준법사약서를

비롯한 김대중 정부의 사면기준에 미달해 석방되지 못했다. 정부의 사면기준은 '준법사약서를 쓰고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다'는 것이었다. 단 정부는 비전향장기수 가운데 17명에 대해서는 복에 가족을 두었다는 점을 참작해 준법사약서를 받지 않고도 석방한다는 일보진전된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준법사약서는 다 받아야겠지만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은전'을 베풀 수 있다는 너그러운 아닌 너그러운이었다. 그러나 그 너그러운은 복에 가족을 둔 두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신광수씨를 석방할 정도는 아니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주교도소에서 오랫동안 함께 복역하면서 그 자체로 위안을 삼아온 두 장기수를 8월 이후 손씨는 대구교도소에 신씨는 광주교도소에 분리수감했다.

## 최초의 지문날인 반대운동

지문날인·알에프 도입 전자감시 예감 - 7월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가 국민들의 반대 정서에 부딪쳐 소강상태에 빠지다가 싶더니 정부는 2000년 3월까지 현행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바꾸기 위해 5월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사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플라스틱 주민증을 만들면서 지문을 채취해 이를 모두 디지털로 전환해 전산화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문날인 거부 선언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도내에서도 80여명이 지문날인 거부 선언했다. 지문날인 거부선언은 지난 30여년 동안 열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에 헌납해 온 인권포기의 역사에 대한 집단적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미 지문을 날인한 '때늦은'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만 것은 이 운동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자동차전주공장에 노동감시 기술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알에프(RF) 카드가 도입된 일도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 노동탄압 맞서 문정현신부 단식투쟁 노동자계급운동에 모범적인 연대 - 7월

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신부가 지난 7월 경찰과 검찰의 노동탄압에 항의해 8일 동안 군산시 번화가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벌였다. 1년 가까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던 기아특수강해고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장첩을 정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기아특수강은 해고자들의 280일이 넘는 투쟁과 여론에 밀려 복직논의를 진행하

## 한상렬 목사 53일 단식

도내 국보법폐지 촉구 거센 투쟁 - 10월

1999년은 도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진 한 해였다. 도내 15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 5월 결성한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연대회의'의 30여 차례에 걸친 목요일집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999인 선언운동', 지난 8월의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9명의 사발단식투쟁이 이어졌다. 9월에는 천주교전주교구 소속의 9명의 신부가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들의 정점에 한상렬 목사(전주교백교회·전북종교인권의회장)의 53일에 걸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있었다. 한목사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 민족이 살길을 모색하기는커녕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만 일삼고 있다"며 정치권의 정쟁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 집회 시위의 자유 크게 제한

독재시절 계승해 현정부가 체계화 - 10월

인권 신장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김대중 정부가 집회의 자유만큼(파업권과 함께)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도 드물다. 그러나 올해 집회의 자유는 두 차례나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지난 4월말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밤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개정 집시법은 집회장소에 가까운 거주자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은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고, 질서유지선을 넘어서면 처벌도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이어 10월에는 국무회의가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는데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이 톱톱하게 정비되기에 이른 것이다. 경찰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이른바 '(준법)각서'를 받아온 것도 김대중 정부 이후의 일이다.

## 농민 농가부채 급증

농가부채 탕감 약속은 선거용 - 12월

지난 12월 10일 제2차 민중대회가 개최됐다. 1차 대회와는 다르게 2차 대회는 농민 중심의 민중대회였다. 2차 민중대회는 농가부채로 인한 파산 직전의 농민들의 요구가 폭발했지만 정작 언론은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직 폭력시위만 보도했다. 선거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농가 부채 탕감"은 항상 선거용일 뿐이라는 농민의 진정한 요구가 묵살된 것이다. 2000년은 반드시 농가 부채가 탕감되어 농민의 속앓이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친 사건을 들춰내 집행유예기간인 해고자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신부는 "이는 관계기관이 여전히 돈과 권력의 시녀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공작정치 악습에서 벗어나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키는 데 힘쓰라"고 요구했다. 결국 해고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기각으로 취소되었다.

IMF이후 경제회생 논리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에 모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을 때 문신부의 단식투쟁은 노동자들과 온몸으로 연대하는 모범이 되었다.

## 군산 미군, 평화운동가 강제금

전국적인 소파개정운동으로 이어져 - 8월

지난 8월 6일 군산미공군 헌병대 20여명은 한미간 불평등한 SOFA개정을 촉구하며 평화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던 문정현 신부와 다른 두 명의 평화운동가를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연행된 3명은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벌이고 있는 금요일집회를 경찰이 폭력적으로 해산시킨 것에 항의해 저녁 무렵 기지정문앞 도로에 앉아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헬멧과 곤봉, 방패로 중무장한 미헌병대는 정문을 열고 나와 농성을 하고 있던 3명을 수감을 채워 연행, 각 방에 1시간 동안 감금한채 물수색을 했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여성들은 심한 성적 모욕감까지 느껴야 했다.

미군은 사건 이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오히려 세 명을 기지 무단침입으로 고소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군의 오만함이 전국의 평화운동가들의 분노를 샀으며 이후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행동'이라는 전국조직이 형성되는 한 계기가 됐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 시작

비율 급증 따라 대응도 주체적 - 8월

IMF가 타친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 스스로가 단결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비정규직노동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북전기원노조와 전주지역 건설일용노조 등 극히 일부만이 조직되어 있었던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경우 99년도에는 군산지역과 익산지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확대되는 등 단결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한편 지난 8월, 깃발을 올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추진위의 경우는 비정규, 영세,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하여 비참한 현실에 물려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활동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노조' 형태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어서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기업별노조와는 다른 차원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  
고

# 부업은 일하는 것이 아닌지!

- 박 미 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추진위원장)

여성노동조합 조합원중 한분이 밤까지 부업을 했는데 그 대금을 1년째 못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 그 규모가 크고 상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피해자 접수 홍보를 냈더니 여러사람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반장 한사람이 피해 집수를 해줌으로써 그 규모를 대충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지역은 익산(남중동 마동 모현동 부송동 송학동 등) 김제 봉등 삼례 군산 등 전북 지역 일대에 걸쳐 있다. 피해자수는 각 지역과 동마다 반장이 있어서 적게는 70~8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었다. 파악된 반장만 해도 7~8명이나 약 600에서 700정도가 현재 피해자로 추정된다. 익산에 사는 사람들치고 이 밤까지는 부업을 안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다리다 지쳐서 임금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만 해도 많다는 주변의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아이가 딸린 가정주부와 정기적인 출퇴근이 어려운 활동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피해금액은 한 반장이 관리하는 금액만도 적게는 400에서 약7000만원가량의 대금이 체불됐기에 이로 미루어 추정해보면 3억원가량의 피해액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익산시 1공단내에 위치한 (주)대이는 농산물 가공을 하는 회사로서 18년간 운영을 해왔다. 계절마다 딸기 양파 포도 밤 등을 주로 부업으로 작업하여 내수 혹은 수출을 했다. 약 3만명의 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이는 4년전 음료수 가공공장을 공장내에서 운영해왔다. 그러다가 98

년 6월에 부도를 냈다. 그러면서 옥천 통상이라는 이름으로 밤가공업을 가을에서 겨울에만 해왔다. 문제는 가공된 밤을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밤까지 부업으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한 것이 부도 이후가 아니라는 거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들에 의하면 이 회사가 생긴 이후 몇 년 안되서 밤을 까면서 그해에 깎 대금중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준다고 미루기만 하다가 일이

## 일을 시키고 돈 주기를 아까워하는 기업주들이 있다.

끝나면 돈이 없으니 다음 일을 할 때 주겠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음 해에 일을 할 때, 밤을 까 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일을 하면 또 일부만 주는 식으로 상습적 체불을 해왔다는 것이다. 가공받은 일본으로 대부분 수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대금지급은 미룬 채 다른 사업에 투자를 무리하게 하다가 부도를 냈다는 것이다. 이제와서는 부도가 나서 돈을 주기가 어렵고 작년까지 밀린 돈은 받기 어려우니 올해 다시 일을 하면 올해 것만 받으라는 식이다.

또한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체불도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직원들이 가입료를 해놓은 상태였다. 또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임금에서는 공제해놓고 공단에는 내지를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피해자 집수를 받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는데 부업은 직장 안에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관할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으로 민사소액재판과 가입료를 해놓은 상태. 그 과정에서 지역신문에

정기적으로 이 피해사례를 홍보했더니 회사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개인 몇 명에게만 임금을 주고 압박음하려 했다. 현재 대아(주)는 전북지역에는 부업을 거의 주지 않고 전남 순천쪽에 밤을 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업하던 분들이 밀린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지역으로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지역정보지에 부업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접수광고가 나가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에게는 대금을 완불하거나 일부는 준 상태이지만 그들은 극소수이다. 얼마전에 회장이 내려와서 소송중에 있는 반장을 제외하고 다른 반장들을 모두 만나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12월말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간곡하게 하고 갔다고 하는데 12월 말이면 사실 대아(주)에 들어오는 현금줄은 끝난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상담을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먼저 다수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들, 손가락마디마디에 걸린 관절염, 거의 18년 동안 안을 일해 어깨가 내려앉으려고 한다는 고통 호소, 1년 동안 일을 배우며 힘들어서 울며 날을 썼다는 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오직 이 길이 생계수단이라며 열심히 매달려온 아저씨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노동부 법원 경찰서에서는 함께 나누지는 못할망정 귀찮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사리사욕은 모두 채우고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의 생계비만을 바라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을 시키고 돈주기를 아까워하는 기업주들이 있는 한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에 삶은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새로운 천년을 떠들어댄다. 우리도 한번 떠들어 보자. 희망이 오는 새로운 천년은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세상, 그들의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 평화와인권 합본1호 색인

# 평화와인권 색인

1. 인권일반 .....	682
2. 인권교육 .....	682
3. 국가인권위원회 .....	683
4. 수사기관과 인권 .....	683
5. 과거청산 .....	687
6. 국가보안법 .....	690
7. 양심수 .....	695
8. 사생활 / 개인정보 침해 .....	699
9. 집회와 시위의 자유(표현의자유) .....	700
10. 감옥의 인권 .....	701
11. 언론의 자유 .....	701
12. 기타 .....	702
13. 건강권 .....	702
14. 교육 .....	702
15. 노동 .....	703
16. 노점상·빈민·주거권 .....	713
17. 농민 .....	714
18. 사회복지 .....	715
19. 어린이·청소년 .....	716
20. 대학생인권 .....	717
21. 여성 .....	717
22. 장애인 .....	718
23. 동성애 .....	719
24. 환경 .....	719
25. 북한 .....	720
26. 주한미군 .....	721
27. 평화·통일 .....	723
28. 기타 .....	724
29. 민간단체 .....	725
30. 인권간행물(책자/영상물) .....	733
31. 인권영화제 .....	733
32. <인권주평> .....	734
33. 특별기고 .....	736

찾는 법 : 94.7.1 준비1호 /54 →94년 7월 1일 준비1호 54쪽



## 1. 인권일반

-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박원순 /94.7.1 준비1호 /54
- 93년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남한 요약 /94.7.14 준비4호 /58
- 김영삼 대통령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로 둔갑 /95.1.6 제4호 /92
- 인권협, 김대통령 킹상 수상 반대시위-킹 여사 “한국의 인권상황 잘 모른다” /95.1.30 제7호 /97
- 국가보안법, 인권실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미국무부 [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 남한편 총론 /95.2.20 제9호 /102
-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정부대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95.2.27 제10호 /103
- 넬슨 만델라 한국방문 인권단체들 성명 /95.7.10 제29호 /140
-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 /95.8.28 제36호 /154
- 현정부는 진심으로 인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고문자행·간첩조작, 노점상 살해, 통일운동탄압 /95.12.4 제44호 /167
-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인권사회단체성명 /95.12.11 제45호 /169
- 숫자로 보는 인권실태 /96.11.30 제60호 /200
- 굶주림에서 자유로울 권리 /96.11.30 제60호 /202
- 숫자로 보는 인권 /96.12.15 제61호 /203
- 한국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97.1.4 제62호 /211
-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97.2.1 제63호 /214
-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국회는 악법 생산공장? /97.12.8 제79호 /273
- 경제위기 속 민중삶 벼랑-IMF시대, 서민·약자들만 더욱 불리 /98.1.19 제81호 /283
- 본색 드러내는 김대중 정부-노동자·철거민 등 농성 집회장에 물대포 아니면 최루탄 /98.5.4 제95호 /339
- <평화와인권> 창간4주년 기념 좌담/김대중정권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하다-지역 인권운동단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98.12.15 제126호 /471~472
- <평화와인권>이 뽑은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98.12.22 제127호 /475, 476
- 이주의 인권뉴스 /99.1.26 제132호 /495
- <자료> 근대국가의 정당화로서 기본권과 인권-한스요르그 잔트켈러 /99.6.1 제149호 /565
- “현정부 총체적으로 문제”-25일, 전국사제단 성명 발표 /99.6.29 제153호 /580
- 새 세기는 ‘인권의 시대’로-‘인권의 날’ 맞아 인권단체들 5대현안 권고 /99.12.14 제176호 /671
- <성명서> 세계인권선언 제51주년을 맞이하며-전쟁과 억압이 종식되는 미래를 위해 /99.12.14 제176호 /674

## 2. 인권교육

- 특권의 시대 끝내자-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학교 첫 개설 /97.4.1 제66호 /225
- 사회복지정책과 시민의 권리-인권학교 강연요지1 /97.4.15 제67호 /230
- 노동인권의 현황과 이후 과제-인권학교 강연요지2 /97.5.1 제68호 /234
- [강연요약] 제2회 인권학교 제1강좌: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세계인권선언50주년-그 의미와 인권의 현주소 /98.5.4 제95호 /342
- [강연요약] 제2회인권학교 제2강좌-아동·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이용교) /98.5.11 제96호 /346
- [강연요약] 제2회인권학교 제3강좌 :곽노현-국민인권기구,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98.5.18 제97호 /349
- [강연요약] 제2회인권학교 제4강좌 :김승환-프라이버시권과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98.5.25 제98호 /354
- [강연요약] 제2회인권학교 제5강좌 :윤찬영-국민생활최저선 확보와 사회복지운동 /98.6.1 제99호 /358

## 3.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법·국가인권기구 밀실추진 문제있다 /98.9.21 제115호 /422
- 국가인권위 권한 유명 무실-법무부안, 독립성·실효성 거의 없어 /98.9.29 제116호 /425
-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해야-전북토론회, “법무부 지나친 개입이 문제” /98.10.12 제117호 /429
- 민간단체, 독자적 인권위원회법안 공개-인권위 독립기관으로, 권한 대폭 늘려 /98.11.10 제121호 /448
-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해야”-국제앰네스티 김대통령에 공개서한 보내 /98.12.8 제125호 /464
- [인권간행물]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99.2.9 제134호 /502
- 인권운동가들 단식농성 돌입-인권법안 반대이사 분명히...30여명 7~13일 /99.4.6 제141호 /531
- 단식농성단 13일 해단식-정부 인권법 철회 농성에 지지 잇달아 /99.4.13 제142호 /536
- 인권법 관련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99.4.20 제143호 /541
-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를-공추위, 70개 단체로 확대개편 /99.5.4 제145호 /548
- 국회 통과 앞둔 국민의 정부 악법들-사립학교 등 교육관계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인권위원회법안 /99.8.17 제160호 /609
- 인권법도 ‘악법’ 반열 오르나-인권공대위, 인권법안 문제제기 /99.10.19 제168호 /641
- 인권단체는 어떤 인권위 바라나 /99.10.19 제168호 /641
- 인권법 연기될 듯-정책위 의장 공대위에 답변 /99.12.21 제177호 /675

## 4. 수사기관과 인권

<경찰>

-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라도 연행은 불법 /94.12.19 제2호 /88
- 도내 작년 한해 시국사범 크게 늘었다-시위마다 강경대처 93년 비해 10배 이상 /95.1.6 제4호 /91
- 경찰, 해고노동자 무차별 폭행, 입원중 환자 강제연행-노동절을 맞아 전국적인 복직투쟁 저지 위해 /95.4.24 제18호 /119
-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슴스런 얼굴-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대응키로 /95.5.1 제19호 /121
- 경찰, 준법투쟁에 불법적인 탄압-수배자 검거 위해 영장제시 무시하고 가택침입 /95.5.29 제23호 /129
- 경찰, 분신노동자 유골강제탈취 만행-유가족에게까지 폭력 휘둘러 /95.6.19 제26호 /135
- "최루가스는 독가스가 잘못 표기된 것"-경찰 최루액 가스 살포, 30여명 전신평부염 고통 /95.8.21 제35호 /151
- 중앙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난사-번3동 철거현장에서, 주민들 책임자 처벌요구 /95.10.9 제41호 /164
-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강원도경, 남한 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96.1.17 제49호 /179
-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허인회씨 3차 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96.3.21 제53호 /190
- 공안탄압, 이제 합법 월간지까지-전주경찰서, '말'지 '길'지 등 반쯤 강요 /96.8.7 제57호 /196
- 조직사건 연행자에게 존중될 인권없다?-최근 공안사건, 기본권 존중조차 없어 /96.11.15 제59호 /198
- 권총위협에 보복구속까지-검경, 농활감시 항의하는 농민들 위협 끝 구속 /97.7.31 제73호 /251
- 경찰, 총기난사 물의-경찰, '경찰관집무집행법' 무시. 권총 7발 쏘며 추격 시장통서 검거 /98.4.27 제94호 /336
- 경찰, 신체의 자유 억압-영장기각률 크게 증가 /98.9.7 제113호 /415
- 전북경찰, 사제복 입은 신부 집단폭행-경찰 책임자, '정치집회니까 불법' 망언 /98.9.29 제116호 /427
- "영장실질심사 받을 권리 고지 안해 석방" /98.11.2 제120호 /441
- 경찰이 피의자 가족수사 의혹-'조직폭력배' 진술 받으려 구타등 가혹행위 의혹 /98.12.15 제126호 /466
- 경찰, 시위노동자 짓밟아-군산노동사무소 항의집회 도중 /99.3.2 제136호 /510
- 알맹이 놓친 '인권보장위' -실효 있을까 의문 /99.3.16 제138호 /517
- 경찰, 피의자 인권 무시경-군산경찰서, 대기실 없이 유치장 구금 /99.3.23 제139호 /521
- '인권보장위' 비웃는 경찰폭력-전북경찰 각종비리연루·폭력남발 /99.4.13 제142호 /535
- 경찰관련 사건주요일지 /99.4.13 제142호 /535
- "깡패 잡을 때 쓰던 폭력 이제는..." 경찰, 사회단체 활동가 폭행 /99.4.27 제144호 /545
- 경찰, 관명사칭 정보사찰-"구청 총무과 이×× 주사다" /99.5.11 제146호 /553
- 도내 경찰폭력 기승-평화집회에 폭력일판, 부상자 속출 /99.8.10 제159호 /603
- 군산미공군 문정현 신부 외 2명 불법연행·감금-1시간 감금, 성적모욕 등 '심각한 인권유린' /99.8.10 제159호 /603
- 책임회피에 폭행까지-고 이상관씨 유족들, 규탄 철야 농성 /99.8.10 제159호 /605
- 출판 경찰 적반하장-취재기자 '공무집행방해' 고소 /99.9.7 제163호 /619
- 시작은 화려했는데-전북경찰 인권보장위 뭐하나 /99.9.14 제164호 /625
- 인권보장위 두 번 열렸다 /99.9.20 제165호 /627
- 경찰, 집회신고 때 각서 요구-강한 항의받고 "강요 아니다" 뒷말 /99.12.7 제175호 /667

- 민중대회 경찰폭력 다수 부상-언론에선 "학생들끼리 서로 밀리다가" /99.12.14 제176호 /672

### <검찰>

- 헌법재판소 긴급집단 "청문회 거쳐 재판관 임명해야"-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94.9.5 준비7호 /63
-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94.8.29 준비6호 /62-1
- 광주고법 항소사건 40%, 도내에서 제기-도민 불이익과 불편감수 /95.5.8 제20호 /124
- "영창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법원 전창일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95.12.18 제46호 /172
-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대책위, 유엔인권조약 근거 제소 검토 /95.12.18 제46호 /172
- "인권신장이나 검찰사기냐"-검찰, 영장실질심사제 폐지추진 /97.7.7 제72호 /248
- 특별검사제만이 해결책-법무부장관·검찰수뇌부 퇴진 :법조비리 처리에 항의 붓물 /99.2.9 제134호 /504
- "한시적 특검제 안된다"-전국 197개 단체 국민행동 나서 /99.7.6 제154호 /584
- 특별검사제만이 해결책-법무부장관·검찰수뇌부 퇴진 :법조비리 처리에 항의 붓물 /99.2.9 제134호 /504

### <안기부-국가정보원>

- 안기부, 사민청 이적단체로 몰아 9명 구속-사민청 85년 결성, 유초하 교수 등 수배 /94.8.29 준비6호 /62-1
- 긴급구속영장 남발-안기부 등 강제연행 합법화 장치로 악용, 뚜렷한 혐의없이 마구남발 인권침해 심각 /94.10.10 준비10호 /68
- 나는 노동당 입당한 적 없다-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95.5.29 제23호 /129
- 안기부, 김동식 기자회견 통해 여론재판-민가협, "안기부 간첩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95.12.11 제45호 /169
- 무리한 간첩조작 중단해야-간첩공대위 안기부 항의방문·박충렬씨 변호인단 고문상처 증거보전 신청 /95.12.11 제45호 /170
- "영창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법원 전창일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95.12.18 제46호 /172
- 안기부법 개악저지 전북공대위 결성-공청회·시민행동의 날 행사 거행 /96.11.30 제60호 /199
-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북공대위 공청회 열려... /96.12.15 제61호 /205
- 안기부법·노동법 반대-전북지역 시민참여 불붙어 /97.1.4 제62호 /210
- 개정 안기부법 통과 여파로 인권유린 잇달아-전주대 학생 4명 구속 /97.4.1 제66호 /226
- 안기부법 재개정되어야 /97.4.1 제66호 /228
- 안기부 수사권 폐지운동 신문광고모금 /97.4.1 제66호 /228
- 안기부 개혁 논의 활발-국회통제 강화, 수사권 폐지 등 강력촉구 /98.4.6 제91호 /324
- 재야인사 출국 '자의적 봉쇄'-안기부 요청-신문광고도 막아 /98.8.3 제108호 /394

- 안기부가 민주인사 살해은폐 주도-유가족, 박창수씨 등 사인규명 요구 항의방문 /98.6.15 제101호 /366
- [자료] 성명서-정부는 안기부를 통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99.1.5 제129호 /484
- 집회장에 007등장-비디오카메라 뺏기고 도주 /99.5.4 제145호 /547
- 서울대 '인권문화제'-국정원 프락치 공작 규탄 /99.7.13 제155호 /589
- 국정원, 김영환씨 가혹행위 /99.8.31 제162호 /615

#### <고문>

-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고소-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94.7.14 준비 3호 /57
- 문국진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94.8.1 준비5호 /62
- 고문방지협약 가입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창립 1주년 /94.10.10 준비12호 /69
- 6공 공안정국의 희생자 강기훈 석방-"결백 밝힐 터" /94.8.29 준비6호 /62-2
- [강기훈 초청강연회] 전주에서 열려, 전주시민회 주최 시민들 진지한 참여-'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있고 도전하고 싸우는 사람의 몫' /94.11.14 준비16호 /75
- 1번 강연회 강연요지 /94.11.14 준비16호 /76
- 나홀간 잠 안재우고 각목으로 구타-조작간첩사건 이화춘 3차 공판 /94.12.10 창간호 /86
-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95.1.6 제4호 /92
- 정부,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인권협, 고문방지협약 청원권 유보철회요구 /95.1.16 제5호 /94
- 부산유괴범 살인사건 무죄입증 결정적 증거 확보 /95.1.23 제6호 /96
-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구형 /95.1.30 제7호 /98
- 2월 8일 고문방지조약 효력 발생-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95.2.13 제8호 /99
-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경찰 고문조작수사 심판 /95.2.27 제10호 /104
-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해소송 선고연기 /95.4.24 제18호 /120
- 나는 노동당 입당한 적 없다-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95.5.29 제23호 /129
- 공소시효 넘긴 직무유기 재판, 법원에서 기각 - 박충렬씨, 이근안 등 고문경관 12명 고소사건 /95.6.26 제27호 /136-1
-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공대위 항소 /95.7.10 제29호 /140
-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95.8.14 제34호 /150
- 무리한 간첩조작 중단돼야-간첩공대위 안기부 항의방문·박충렬씨 변호인단 고문상처 증거보전 신청 /95.12.11 제45호 /170
-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대책위, 유엔인권조약 근거 제소 검토 /95.12.18 제46호 /172
- 심판받는 한국인권상황-제네바에서 고문방지조약 심의회 열려 /96.11.15 제59호 /198
- '고문처벌' 시효 없애야 /99.11.2 제170호 /649
- 이근안 정형근 등 고문범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고문피해자 기자회견-'고문범죄 진상규명·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99.11.30 제174호 /664

#### <기타>

- 긴급구속 경·검·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긴급구속 후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94.10.24 준비13호 /71
- 재야인사들 여권 안내죄 -법적 흠 없어도 '경력' '조사중' 이유 /99.3.9 제137호 /513
- 청와대 경호원들, 세계NGO대회장서 평화시위대에 "죽여버리겠다" 행패 /99.10.12 제167호 /636

## 5. 과거청산

#### <일본군위안부>

-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촉구-국제여론 환기 위한 '민중재판'추진 /94.7.25 준비4호 /60
- "교류센터 기금안 반대"-일총리에 전후문제 해결촉구 /94.8.1 준비5호 /62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기록영화제작 /94.8.1 준비5호 /62
- 일본정부 전후보상 처리방안 반박-대한변협 /94.9.5 준비7호 /64
-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 위해 14-18일 일본방문 /94.9.26 준비9호 /65
-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보내야 /94.12.10 창간호 /86
-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니들 /94.12.26 제3호 /89
-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열려-27일 서울, 북한 정신대 할머니 등 3명 참가예정 /95.2.20 제9호 /101
- "일본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95.3.6 제11호 /105
- 세계여성회의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95.3.6 제11호 /105
- 5월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방한-일본군 중군위안부 증언과 조사활동 위해 /95.4.24 제18호 /120
- "50년전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유엔, 군 위안부 실태조사 보고서 /95.5.29 제23호 /130
- 일본정부, 민간위로금으로 중군위안부 보상-여성단체, 국가차원의 사죄와 법적배상 촉구 /95.6.19 제26호 /136
- 정대협, 위안부 문제에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 /95.6.26 제27호 /136-2
-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철회촉구' 제175차 수요시위 /95.7.24 제31호 /144
- 정대협 일 수상담화비판 /95.8.21 제35호 /152
- 일 민간기금 위안부 조사-정대협 등 여성단체 반대 /95.9.18 제38호 /157
-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96.8.7 제57호 /196
- 정부, '위안부 일본배상' 사실상 포기 /98.4.27 제94호 /336

#### <5.18>

- 전주교도소 재소자 지난 8일 단식풀어 /94.11.14 준비16호 /76
- 5·18 15주년 기념 및 기소촉구 전북도민대회-"책임자 처벌은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95.5.15 제21호 /125
-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목격자를 찾습니다-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95.6.5 제24호 /132

- 최전대통령 증언 나서라 /95.6.12 제25호 /134
- 5·18 국민위, 종교계 최전대통령에게 증언 촉구 서한 /95.6.19 제26호 /136
-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국제인권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95.7.17 제30호 /141
- 특별법 특별검사제로 광주학살자 처벌-전북지역 규탄집회, 전북총련 항의농성 시작 /95.7.24 제31호 /143
-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 각계운동 활발 /95.7.31 제32호 /145
- <현장스케치> '삭발식' 끝에 터져버린 5·18 유가족의 눈물 /95.7.31 제32호 /145
- 5·18 재향고 기각, 각계 항의와 성명 발표-5·18 공대위 천막농성 돌입 /95.8.7 제33호 /148
-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 결성-선전 및 서명, 청원사업전개 /95.8.7 제33호 /148
- 5·18 특별법 제정 본격추진-부상, 사망유족 전·노씨 살인혐의 고소 /95.8.21 제35호 /142
-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95.8.28 제36호 /154
-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95.9.4 제37호 /156
-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익산 시민결의대회 /95.9.4 제37호 /156
- 5·18 특별법 제정요구 전국확산-전북지역 각계각층 선언운동 전개예정 /95.9.18 제38호 /157
- 검찰총장 등 탄핵소추-검찰총장 내정자 교체요구 /95.9.18 제38호 /158
-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5·18 국민위 1백만명 서명추진 /95.9.25 제39호 /159
-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전북지역 투쟁 가속화-종교·교육·여성 등 각계 선언 시작 /95.10.2 제40호 /161
- 전북지역 5·18 특별법 제정운동 계속 확산-도내경찰, 5·18 서명자 및 선언자 뒷조사로 물의 /95.10.9 제41호 /163
- 5·18 국회위중수사 촉구 /95.10.9 제41호 /163
- "특별검사제 없는 5.18특별법은 기만"-시민사회단체들, 특별검사제 강력 촉구 /95.11.27 제43호 /165
- 전북지역, 특별검사제 요구 시위-전북연합, 익산민주시민연석회의 등 /95.11.27 제43호 /165
- 비정상적 언론 집중성토되어야-군사반란자행적보도와 인권탄압행위보도 심각한 차별 /95.12.4 제44호 /168
- 9일, 5.18비대위 전국집회-전주·군산에서도 특별검사제 수용 요구 /95.12.11 제45호 /170
- 5.18을 넘어 민주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범국민비대위,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95.12.26 제47호 /174
-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전국연합·민변 성명 /96.1.24 제50호 /183
- 5·18 열사정신, 돈으로 바꿀 수 없다-17주년 광주민중항쟁을 기리며 /97.5.17 제69호 /237
- 광주학살 관련자 서훈박탈 축소기도 /97.7.7 제72호 /247
- "오월" 아직 끝나지 않았다-진실규명 안된 상태-정부, 해결의지 전혀 안 밝혀 /98.5.18 제97호 /347

#### <5, 6공 청산>

- UR국회비준 저지와 12·12 반란자 처벌을 위한 전북도민대회 /94.12.19 제2호 /88
- UR국회비준 저지와 12·12 반란주범 처벌을 위한 전북도민대회 결의문 /94.12.19 제2호 /88
- 현재, [12·12] 내란, 반란 법적판단 또 회피하다 /95.1.23 제6호 /95
- 최규하씨 면담거절-여성계 대표들, 결단촉구 /95.5.22 제22호 /128
-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95.6.5 제24호 /132

- 삼청진상규명투쟁위원회 진상규명 제차 요구 /95.8.28 제36호 /154
- '5, 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박종철 기념사업회 주최로 /96.1.17 제49호 /179
- <자료>현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를 올바르게 하라!-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96.1.17 제49호 /180
- "국민 손으로 독재자 부정축재 재산 환수"-참여연대, 인권피해자로 소송단 꾸릴 예정 /96.2.28 제52호 /187
- 전씨 세 아들 즉각 처벌-유가협 등 고발장 접수 /96.3.21 제53호 /189
- "인권침해조사기구 설치할 때" /97.9.3 제75호 /258
- <성명서>전노씨 추석전 조기사면 제기에 대한 전북지역 사회단체 성명 /97.9.3 제75호 /259
- '무조건 사면론'이 나라망친다-역사의 심판이 정권욕을 넘어서야 한다 /97.9.19 제76호 /261
- 전·노 사면반대 캠페인②-'광주민중항쟁구속자회'의 전·노 사면주장을 비판한다 /97.10.30 제78호 /269
- 전·노 사면반대 캠페인③-전노사면은 민주주의를 말아먹자는 주장! /97.12.8 제79호 /273
- 전·노 사면반대 캠페인④-전·노 사면복권과 부정부패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 /98.1.5 제80호 /279

#### <집단학살>

- 노근리 학살 철거규명 촉구-<소파 국민행동> 성명 /99.10.12 제167호 /636
- 학살 진상 규명 등 촉구-지난달 동아시아 학술심포지움 /99.12.7 제175호 /669

#### <의문사>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의문사는 권력기관의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어' /94.11.14 준비16호 /75
-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 국회법사위 /95.1.30 제7호 /98
- 학살자 특별대우 중단 요구-유가족협의회, 5·6공 의문사 항의 /95.11.27 제43호 /166
- 열사 명예회복·의문사 진상규명 시급-열사 범추위, 특별법 청원 등 움직임 활발 /98.9.21 제115호 /423
- 의문사 유가족 진상규명 촉구사발 /99.4.6 제141호 /533

#### <민족민주열사>

- 박종철 열사 8주기-고문책임자, 국회의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95.1.16 제5호 /94
-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95.1.23 제6호 /96
- 박복실(요안나) 3주기 추모미사-전북지역 노동자들, 당당하게 살았던 고인의 뜻 기려 /95.3.13 제12호 /108
- 4·19 기폭제, 김주열 열사 추모각 초라한 준공식 /95.4.3 제15호 /114
- 고 박복실 동지 추모미사 /97.3.7 제65호 /223
- "인혁당, 유신정권이 조작"-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해 대책위 발족 /98.11.10 제121호 /446
- 인권대회 열려 /98.11.24 제123호 /454
- [광고] "이제는 고운 옷 입고..."-고 박복실 열사 7주기 추모식 /99.3.16 제138호 /519

· "유공자 범안 폐기는 민주화운동 부정"-특별법 전환기도 중단' 요구 시민단체 성명 /99.5.18 제147호 /557

## 6. 국가보안법

### <일반>

-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94.9.12 준비8호 /64-1
-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94.9.26 준비9호 /66
- 부산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제청-현행 국가보안법,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침해주장 /95.1.23 제6호 /95
- 국가보안법, 인권실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미국무부 [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 남한편 총론 /95.2.20 제9호 /102
-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정부대표, 유엔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95.2.27 제10호 /103
- 조작간첩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요구-천주교인권위원회 /95.3.20 제13호 /110
-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아비드 후세인 유엔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96.1.24 제50호 /184
- 역시 세계적인 '국가보안법'-외국단체들, "진보운동 탄압말라" /98.7.13 제105호 /382
- 현재 "불고지죄 합헌"-법이라는 이름의 폭력 /98.7.20 제106호 /387
- 유엔 결정안 즉각 수용 촉구-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항의 성명 /99.2.2 제133호 /498
-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 "국제규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99.2.2 제133호 /498
- <DJ정부 1년, 국보법 보고서> /99.6.22 제152호 /576

### <전국 : 사건 및 소식>

- 범민련 관련 3명 구속-광주전남연합 오병윤씨 등 /94.7.6 준비2호 /56
- 평불협 법타스님 구속-회보내용 문제삼아 /94.7.25 준비4호 /59
- 박홍총장 사퇴촉구 /95.1.30 제7호 /97
- 김삼석 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백홍용씨 김씨 남매에게 편지 /94.11.29 준비18호 /79
- 구국전위사건 안재구씨 무기징역 선고 /94.12.10 창간호 /86
- 전국연합 이창복의장 징역 10월 선고 /94.12.19 제2호 /88
- 김삼석 남매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요구 민가협 목요집회 /95.2.20 제9호 /102
-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하는 태도 여전 /95.2.27 제10호 /104

-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회합 알고도 1년간 방치-구국전위사건, 안재구씨 항소심 2차공판 /95.3.13 제12호 /108
-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 재야인사구속 비난성명 /95.3.20 제13호 /110
- 박총장 발언, 제2 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법정진술 내용 달라 '암살지령'에 대한 진위논란 /95.3.27 제14호 /111
-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이창복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95.4.3 제15호 /113
-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씨 석방 /95.4.10 제16호 /115
- 정치적 탄압 중지-민정련 성명발표 /95.4.17 제17호 /118
- 국가보안법 7조 1항 위헌심판 청구-[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경상대 교수 /95.5.22 제22호 /127
- 희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긴급구속 /95.5.22 제22호 /128
- 광주노동사목 김용진씨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95.6.12 제25호 /134
-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구속자 급증-구속자 1천2백34명중,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95.6.19 제26호 /135
- 48년 국보법 제정 이후, 총 2천7백여명 구속-'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열려 /95.7.24 제31호 /144
- 신귀영씨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95.7.31 제32호 /146
- 박교수 공소사실 부인 /95.8.14 제34호 /150
- 대대적인 검거선봉 조짐-때늦은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등 /95.8.28 제36호 /153
- 박용길 장로, 첫재판 거부 /95.10.9 제41호 /164
-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허인회씨,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위반 /95.12.26 제47호 /174
- 계속되는 선거철 공안탄압-희망의 노래 꽃다지 대표 이은진 구속 진보정치연합 회원 무더기 구속 /96.2.14 제51호 /186
- 성남미래 김태년씨 보석-김씨, 재판에 최선 다할 것 /96.3.21 제53호 /189
- 사노맹 관련 또 연행-김정희씨 임신3개월 /96.3.21 제53호 /190
- 단체협상 중 노동자 구속-정성철씨 등 국보법 위반 /96.4.24 제55호 /193
- 97년 주요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 /97.5.17 제69호 /239
- "한총련 깨기 좌시 않겠다"-탈퇴거부, 공안탄압 저지 비대위 띄워 /97.8.8 제74호 /253
- 민주사회단체 탄압 줄이어-부민노청 이어 미래정보센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98.1.5 제80호 /282
- '천리마' 이적단체 무죄-"국보법 무리한 적용에 제동" /98.5.18 제97호 /349
- IS 17명 국보법 구속-'노동자 총파업 선동'등 이유 /98.5.18 제97호 /349
- 함운경씨 불고지죄 무죄-항소심서 원심 뒤집고 승소 /98.6.15 제101호 /366
- '대공경찰 살아남기 작전'-청년단체 탄압 줄이어-관악노동청년회-안민청 이어 진보민청 /98.6.29 제103호 /373
-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검찰자백이라도 임의성 없으면 증거 안돼 /98.7.6 제104호 /379
- "진보운동단체 탄압말라"-진보민청 이적규정에 사회단체 공동대응 /98.7.6 제104호 /379

- 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98.8.24 제111호 /406
- 국보법 적용, 공안당국 입맛대로 /98.8.31 제112호 /409
- 김삼석씨 연행조사 /98.11.17 제122호 /451
- 새해 학생운동 '대탄압' 예고-고대 총학생회장 등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99.1.5 제129호 /483
- 서진청 회원 6명 구속 /99.5.11 제146호 /553
- '노동자 연대' 입막음-〈국제사회주의자〉 잇단 구속 /99.6.8 제150호 /567

#### <전북 : 사건 및 소식>

- 안기부 전북지부 '사노맹' 회원구속-'주사파 조직사건'으로 조작우려 /94.9.5 준비7호 /63
- 전북지역 학생 국보법 4명 구속-영장제시 등 공식절차를 밟지않는 한건 올리기식의 강제연행 /94.10.24 준비13호 /71
- 범민족대회 관련 원광대학생 4차공판-학생들 복일동 파출소 사건 무관 주장 /94.12.26 제3호 /90
- 범민족대회 관련 원광대생 5차공판-사회부조리 개선 위해 노력, 최후진술 /95.1.16 제5호 /109
- 범민족대회 원광대생 선고공판 /95.2.20 제9호 /102
-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신공안정국 만들기-원광대학생들 '구국자주대오' 사건으로 대거 연행 /95.6.5 제24호 /131
- 구속된 원광대생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95.6.12 제25호 /134
-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추가연행 /95.7.24 제31호 /144
- 또다시 반국가단체 빌미로 우석대학생 출신 5명 구속 /95.9.4 제37호 /156
- 익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후원의 밤" 성황-양심수석방 촉구·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결의 /96.1.24 제50호 /181
-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도내 학생운동 조직사건!-도경, 원광대학교 정현중군 연행 /96.4.24 제55호 /191
- 이광철씨 무죄석방 환영대회 /97.3.7 제65호 /222
- "한총련 스스로 심판하게 하라"-민주노총전북본부 성명 /97.6.18 제71호 /243
- 진보죽이기 "잡아들이고 보자"-전북대에서만 대학생 20명 국가보안법 등 구속 /97.7.7 제72호 /248
- 공안탄압, 군부독재 능가-전북총련 대의원, 천막농성투쟁 돌입 /97.7.31 제73호 /250
-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진행경과 /97.10.6 제77호 /267
- 이적단체구성혐의부분 무죄 선고-'혁신대오' 이적단체구성 무죄 /98.3.2 제86호 /304
- <자료요약> "전북대혁신대오"사건 판결문 중 '이적단체구성'혐의 무죄부분 /98.3.9 제87호 /309
- "레드헌트 상영 막아라"-여당 4·3진상조사특위 전북대 당국의 문의에 불허입장 밝혀 /98.4.6 제91호 /323
- 자주대오 사건 3명 2-3년 구형 /98.10.26 제119호 /438
- 전북대 혁신대오 이적단체 무죄확인 /98.11.10 제121호 /446
- <자료>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이적단체 구성 무죄 :규약 문건없고 대부분 신빙성없는 증거들 /99.1.12 제130호 /487
- '자주대오재건위' 조작의혹-기무사·경찰, 군인 등 원광대 출신 11명 조사 /99.8.2 제158호 /599

- 자주대오재건위 '조작' 규탄 /99.8.10 제159호 /604

#### <문규현신부>

- 본지발행인, 문규현신부 보안관찰법 기소-전주지검, 7일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95.12.26 제47호 /173
- 문규현신부 구속-무리한 국보법 적용 공안기류 조성 /98.8.31 제112호 /409
- 문규현 신부 석방촉구 성명들 /98.8.31 제112호 /412-2
- 인권유린 관련자 처벌해야-문규현신부, 무죄석방운동 확산 /98.9.7 제113호 /414
- "문신부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서학동성당 매주 5명 시국기도회 /98.9.14 제114호 /417
- 경찰, 평화행진조차 막아-문신부 석방촉구 촛불행진 원천봉쇄 /98.9.21 제115호 /421
- "국민정부에 통한의 슬픔"-문규현신부 첫 공판, 공소사실 부인 /98.10.19 제118호 /433
- 문규현신부·강희남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98.10.26 제119호 /437
- (요약) "양심과 인격 가두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문규현신부 제 1차 공판 모두진술 내용 /98.10.26 제119호 /439, 440
- [자료] 보석허가청구서-"문규현신부 잠입탈출죄 적용은 억지" /98.11.17 제122호 /450
- 문목사 회고모임 귀국자 연행-대책위 사법처리 반대 /99.6.8 제150호 /569

#### <강희남목사>

- 전북연합고문 강희남목사 재판-10월 28일 서울지방법원, 방북이유 등을 정당하게 밝혀 /94.11.6 준비15호 /74
- 강희남목사 2차공판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려-통일운동의 대의, 정당하게 밝혀 /94.11.21 준비17호 /77
- 강희남목사 선고에 앞서 최후진술, 재차 재판거부의사 밝혀-우리나라 법적용, 없는자에게는 가혹 있는 자에게는 관대 /94.12.26 제3호 /89
- 강희남목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95.1.6 제4호 /91
- 강희남목사 석방환영회 /95.1.16 제5호 /93
- 강희남목사 군산교도소 수감 /97.2.27 제64호 /218
- 강희남목사 석방대책위 결성 /97.4.15 제67호 /231
- 강희남목사 다시 구속-8·15 통일대축전 행사직후 /98.8.24 제111호 /406
- 강희남목사 석방 촉구 /98.9.7 제113호 /414
- "강희남목사를 석방하라"-탄원서와 기도회 등 잇달아 /98.10.12 제117호 /429
- 다시 재판정 선 통일운동가-강희남목사도 첫 재판 /98.10.19 제118호 /433
- 문규현신부·강희남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98.10.26 제119호 /437

#### <조작간첩 이화춘>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씨 1차공판 열려-공작금 받은 사실 전면 부인 /94.11.29 준비18호 /80

- 나흘간 잠 안재우고 각목으로 구타-조작간첩사건 이화춘 3차 공판 /94.12.10 창간호 /86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 재판 증인신문 연기 /94.12.19 제2호 /88
- 조작간첩 이화춘 사건-안기부, 거짓진술서 작성케한 사실 드러나 /95.1.6 제4호 /91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 제6차 공판-숙부에게서 받은 금액 공작비와 무관입증 /95.1.23 제6호 /95
- 이화춘 재판, 범민족대회 관련 원광대생 재판 연기 /95.1.30 제7호 /97
- 조작간첩사건 이화춘 7차공판-검찰,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구형 /95.2.13 제8호 /100
- 이화춘 사건 선고공판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95.2.20 제9호 /102
- 조작간첩 이화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95.5.22 제22호 /128
- 국가보안법 부칙조항 형평성에 어긋나-이화춘씨 대법원 상고심공판 원심확정 /95.9.25 제39호 /160
- “양심에 따랐을 뿐”-전북 출신 조작간첩피해 양심수 이화춘씨 준법서약 거부하며 대전교도소 4년째 수감중 /98.12.8 제125호 /464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 속보이는 공안정국-울산, 구청장 포함 조직사건 /98.7.27 제107호 /390
- ‘영남위’ 15명 전원 기소-대책위, “짜맞추기식 공안조직” /98.9.14 제114호 /419
- 울산동구청장 보석 촉구-정리해고 반대 공약한 구청장 ‘동창회’ 사건 구속 /98.12.1 제124호 /458
- ‘영남위’ 검찰구형 “분노” /99.1.5 제129호 /483
- 검찰증거 그대로 인정. 시민단체, “사법부 폭거” -영남위사건 1심 중형선고 /99.1.19 제131호 /490
-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에 부처 /99.1.19 제131호 /492
- ‘디스켓 조작수사’ 의혹-울산대책위 사건조작 거둬 주장 /99.4.20 제143호 /539
- ‘영남위’ 박경순씨 구속중 모친별채-대책위 구속집행정지신청 내기로 /99.4.27 제144호 /544
- 검찰 뒤늦게 공소변경-〈영남위 사건〉 /99.5.11 제146호 /553
- ‘영남위’선고 이적단체 혐의적용 /99.5.18 제147호 /556
- <자료>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요지-“불법 감청·촬영자료 증거능력 없다” /99.5.18 제147호 /557
- “국회차원 진상규명 시작하라”-‘영남위’ 사건 가족들 국민회의 울산지부 농성 /99.5.25 제148호 /561
- 법무부 ‘영남위’ 분리수감-상고심 앞둔 구속자들 항의 목살 /99.6.1 제149호 /563
- <인권비디오>동창회-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99.8.31 제162호 /616
- 보안법 적용 이적단체 판결-‘영남위원회’ 대법원 판결-디스켓 증거능력은 부인 /99.9.7 제163호 /619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전국연합 대의원대회 /95.2.27 제10호 /103
-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96.2.28 제52호 /188
-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96.8.7 제57호 /195
-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정치기본권 실현의 족쇄 국가보안법 성토 /97.4.1 제66호 /226

- [강연] 국가보안법 철폐없이 ‘개혁’은 거짓말 /98.8.10 제109호 /399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전국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98.10.12 제117호 /431
- 국보법, 50년이면 충분하다-국가보안법 제정 50년, 폐지운동 50년 /98.12.1 제124호 /458
- 국가보안법 철폐 달갈시위 /98.12.8 제125호 /464
- 국보법 폐지 연대회의 발족-전북 15개 사회단체 4일부터 본격 활동 /99.5.4 제145호 /547
- 국보법개정 반대서명까지-민가협 등 한나라당사 앞 항의시위 /99.8.24 제161호 /612
- 보안법폐지 요구 삭발-국가보안법 전면철폐 힘찬 결의 /99.8.31 제162호 /615
- “국가보안법 폐지”-천주교연대 전국순회투쟁 /99.8.31 제162호 /615
- 천주교 사제들 삭발단식-국보법 폐지 요구 명동성당에서 8일째 /99.9.14 제164호 /623
- <인터뷰> 삭발단식투쟁 리수현 신부 /99.9.14 제164호 /623
- ‘국보법 폐지’ 도내 확산-사제 등 10여명 단식농성-대규모집회 /99.9.20 제165호 /627
- 더이상 침묵 않겠다-천주교 전주교구 보안법폐지 운동 선언 /99.10.5 제166호 /631
- 민교협, 사제단 단식투쟁 지지선언-“국보법은 칼과 황금 지키는 폭력” /99.10.5 제166호 /632
- “이번 국회에서 폐지를”-도내 19개 종교단체 40일 단식투쟁 돌입 /99.10.12 제167호 /635
- <인터뷰>우린 너무나 선량한 시민 아닌가-국보법 폐지 단식 결단한 박상희 목사 인터뷰 /99.10.12 제167호 /635
- “국보법은 노동자 세력화 걸림돌”-지난주 범국민 행동의 날 ‘국보법 폐지’ 촉구 /99.10.19 제168호 /640
- “인권대통령 허구”-민교협 등 국보법 폐지 촉구 /99.10.26 제169호 /645
- ‘국보법 폐지 현수막’ 절도 주범은? /99.10.26 제169호 /645
- “국보법 폐지” 요구 확산-종교계 이어 도내 교수들 농성·143명 서명 /99.11.2 제170호 /649
- 제정 이래 폐지운동 최고조-전국에서 도내까지 “국보법폐지” 한목소리 /99.11.9 제171호 /651
- <인터뷰>[40일 단식 36일째 전북종교인협의회 한상렬 목사] “국보법 없애도 안보 지장없다” /99.11.16 제172호 /657
- 종교계, 국보법 폐지운동에 앞장-도내 기장교회 “폐지” 촉구 /99.11.16 제172호 /657
- 한상렬 목사 44일째 단식-국보법 폐지 단식기도 계속하기로 /99.11.23 제173호 /659
- 미국무부 “국보법 표현의 자유 침해”-호남사회연구회 ‘국보법의 악법성’ 토론회 /99.11.23 제173호 /659
- “민주주의·인권 역행”-국보법 51년 <철폐연대> 성명 /99.11.30 제174호 /663
- 국보법 사실상 현상유지-전북연대회의, “개정추진 기만적” /99.12.7 제175호 /667
- ‘국보법 개정’ 시늉만-김대통령, 본질적 개정의지 안보여 /99.12.7 제175호 /669

7. 양심수

<양심수>

-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국제엠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94.7.6 준비2호 /55

- 6 7 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현재 양심수 646명-전북지역 강희남 목사 등 14명 구속, 민가협 발표 /94.9.12 준비8호 /64-2
- 전국 교도소 공안정국 편승, 양심수 면회 가족 외 금지 /94.9.26 준비9호 /66
- 장기수 선생님과과의 대담 /94.11.29 준비18호 /81
- 전북지역 장기수 및 양심수 현황 /94.11.29 준비18호 /82
- 비전향 장기수 송환요구 /95.1.6 제4호 /92
-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요구 목요집회 /95.1.6 제4호 /92
- 불교 인권위 비전향 장기수 송환 위한 서명시작 /95.1.23 제6호 /96
- 빨치산 비전향 출옥 장기수 윤기남씨 위암 사망 /95.3.6 제11호 /105
- 고 윤기남 선생 통일 민중장 집행위원장 기세문씨 구속 /95.3.13 제12호 /108
-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조짐-전남경찰청, 장례식 관련자 12명 출두 요구서 /95.3.20 제13호 /110
- 장기수 고 윤기남씨 묘지 광주시청 5·18 전 이장 압력 /95.5.15 제21호 /125
- 제일한국인 정치범 석방촉구-일본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95.7.10 제29호 /140
- 8·15 특사 연기가가능성 높아져-민가협 등, 무조건적인 사면복권 수배해제 요구 /95.7.31 제32호 /146
- 이화춘씨 석방촉구집회 /95.7.31 제32호 /146
- 장기수·양심수 석방을 위한 1995인 선언-7-13일까지 민주인사에 대한 전면적 석방 캠페인 /95.8.7 제33호 /147
- 박용길 장로·은수미씨 석방촉구-엠네스티, 박장로 양심수 선정, 긴급행동 돌입 /95.8.7 제33호 /147
- 장의균씨 만기출소 /95.8.7 제33호 /148
- 김선명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기득권층만 대폭혜택-초장기수 24명 등 양심수 4백 40여명 남아 /95.8.14 제34호 /149
-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10일 전주교도소에서 /95.8.14 제34호 /150
- 장기수 문제 해결 안돼-장기수 65명 아직도 콘크리트 감옥에 /95.8.21 제35호 /152
- 기세문씨 집행유예 석방 /95.8.28 제36호 /154
- 일곱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민가협 창립 10주년 기념 /95.12.4 제44호 /168
-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국가안보이유 장기수 보호감호처분 정당화 /95.12.11 제45호 /169
- 범민련 등 양심수석방 촉구-불교인권위 성명 /95.12.11 제45호 /169
- 12월 현재 장기수 포함 양심수 3백 52명-11월에만 국가보안법 적용 59명, 민가협통계 /95.12.26 제47호 /173
- “법을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김선명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96.1.24 제50호 /182
- <자료>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96.1.24 제50호 /182
- 범민련 고애순씨 재수감 위기되면-손배소송 첫재판 5월 10일 /96.4.24 제55호 /193
- 장기수 2명 단식농성-광주교도소 김동기씨 등 /96.4.24 제55호 /193
- 문정현 신부님께 -대구교도소에서 박영희 /97.3.7 제65호 /222
- 장기수 진태운씨 운명-26년 복역 88년 출소 /97.4.15 제67호 /231

- 전주교도소 장기수 단식농성 /97.7.31 제73호 /251
-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5·6공 양심수 우선 석방을 위한 캠페인 /97.8.8 제74호 /253
- 양심수없는 세상 요원한가-최근 시국관련 양심수 폭증 /97.8.8 제74호 /254
- 힘차게 울리는 양심수 석방요구-5·6공 양심수 우선석방’ 서명운동 등 불붙어 /97.8.8 제74호 /255
- 양심수 석방 캠페인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하여①>-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민주운동에 간첩 조작 /97.8.8 제74호 /255
- 양심수석방 캠페인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②>-‘6월항쟁 장기수’ 허정길-무리한 수사와 고문이 빚어낸 인권피해자 /97.9.3 제75호 /259
- 양심수석방 캠페인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③>-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가혹한 형벌 /97.9.19 제76호 /263
- 양심수석방 캠페인 <과거청산, 양심수 석방으로부터④>-학생운동탄압, 기본적인 민주주의마저 짓밟아 /97.10.6 제77호 /267
- 양심수 석방 캠페인④-다시 양심수를 생각한다 /97.12.8 제79호 /275
- 양심수 석방 캠페인⑤-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98.1.5 제80호 /280
- 김영삼 경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97.10.1 현재 총구속자 4060명 /98.1.5 제80호 /281
- 양심수 면회거부, 항의시위-전주교도소 인권의 사각지대 /98.1.5 제80호 /282
-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기도회’ 등 양심수 석방운동 활발 /98.2.3 제82호 /287
- 양심수 인권탄압 ‘공세적’-전주교도소, 인권유린 누적 심각 /98.2.10 제83호 /291
- “장기수 면회보장” 약속 받아내-전주교도소장 ‘퇴진’ 등 싸움에 밀려 /98.2.16 제84호 /295
- 양심수·장기수면회 전면보장과 최해룡 전주교도소장 퇴진 싸움일지 /98.2.16 제84호 /296
- 장기구금, 고령으로 앓고 있는 초장기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원석방돼야 한다 /98.2.23 제85호 /299
- 일부 언론, 양심수 석방 반대발언 /98.2.23 제85호 /301
- 양심수에게서 온 편지-조덕원 /98.2.23 제85호 /301
- 양심수석방 ‘빛좋은 개살구’-김대중정권 인권철학, 실천의지 부재 다시 확인 /98.3.16 제88호 /311
- <도내 인권단체 합동논평> 현정부는 즉각 양심수 전원석방 의지를 천명하라 /98.3.16 제88호 /312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①> 창살 안에 삶을 묻은 사람들 /98.3.30 제90호 /321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②> 감옥에서도 통일을 위해 살겠다(초장기수편) /98.4.6 제91호 /325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③> 국가권력에 파괴당한 사람들(민주 통일운동 관련) /98.4.13 제92호 /329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④> 죄라면 일본에 다녀온 것이 죄(일본관련) /98.5.4 제95호 /341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⑤> 전주교도소 장기수-유일한 증거 ‘피의자 신문조서’ /98.5.11 제96호 /345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⑥> 전주교도소 장기수-사상 때문에 갇힐수 없다 /98.5.25 제98호 /353
-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재범 판단 근거없다 /98.6.29 제103호 /375
- 감옥에서 온 편지-대전교도소에서 김성만 /98.7.6 제104호 /379
- 양심수 가족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전원석방촉구 집회 /98.7.20 제106호 /387



- "말만 할래도 눈물이 난다"-손병선 인터뷰 /98.7.20 제106호 /387
- 재야원로, '양심수 조건없이 석방' 촉구 /98.8.3 제108호 /394
- 양심수 가두고도 민주정권?-양심수 전원석방 위한 각종 행사 이어져 /98.8.10 제109호 /397
- 뒤로가는 인권정책-8·15특사,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98.8.17 제110호 /401
- 8.15 특사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시각 /98.8.17 제110호 /401
- 손성모씨등 사면 안될 듯-3.1석방 대상 '비전향' 정부주장 사실과 달라 /99.2.2 제133호 /497
- 손성모씨 석방 난망-국민회의 "29년 이상 17명" 사회단체들, 석방촉구 기자회견 /99.2.9 제134호 /501
- 구속 양심수 치료 호소-영남위 이른미씨 교도소에서 고통 /99.3.2 제136호 /510
- 노동자출신 양심수 최호경 <석방추진위원회> 결성된다 /99.5.4 제145호 /548
- 처우개선·보안법 폐지 등 요구-광주교도소 미결 학생양심수들 단식투쟁 /99.5.25 제148호 /561
- 종교계 1080명 인권선언-"아직도 양심수 가두는가" /99.5.25 제148호 /561
- 출소 장기수 복송을-종교계 "인도적 견지에서 마땅히" /99.6.8 제150호 /567
- 하루빨리 조건없는 수배해제를-60여 YS시절 정치수배자 300여일 농성 /99.6.22 제152호 /576
- <조작간첩 양심수 이화춘씨 옥중편지> "감옥 사정 달라진 게 없다" /99.7.20 제156호 /594
- '양심이 그를 가두고 있다'-양심수 이화춘씨 석방촉구 기자회견 /99.8.2 제158호 /599
- 조건없는 전원석방을-전북연대회의 8·15석방촉구 /99.8.2 제158호 /601
- 최호경 이화춘씨 석방-8·15 사면, 정치수배자도 준법서약 요구 /99.8.17 제160호 /607
- "김현철이 독립운동가쯤 되나"-국민회의 도지부농성 등 사면반대 행동 잇달아 /99.8.24 제161호 /611
- <자료> 8·15석방 양심수 기자회견문 /99.8.24 제161호 /613

####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제>

- 인권단체, 서강대 총학생회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 규탄시위 /95.1.23 제6호 /96
- 사상전향제도 철폐 주장-장기수 강용주씨 20일간 단식, 폭력 앞에 당당한 신념 /98.5.25 제98호 /352
- <기획-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⑥> 전주교도소 장기수-사상 때문에 감힐수 없다 /98.5.25 제98호 /353
- 준법서약은 제2의 전향제도-법무부, 양심수에 '전향서' 대신 '서약서' 받기로 /98.7.6 제104호 /377
-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98.7.6 제104호 /377
- 한국 현실 가슴아프다-국제민주변호사협회, 장기수 '무조건 석방' 촉구 /98.7.13 제105호 /382
- '인도적 차원 석방' 옛말-준법서약제 도입-사상전향제 강화 /98.7.27 제107호 /390
- 내가 준법서약서를 안쓰는 이유-강용주 /98.8.24 제111호 /407
-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정당화 도구"-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투쟁 /98.9.29 제116호 /428
- 조건없는 석방 불과 19명-준법서약 걸려 손성모·신광수씨 빠져 /99.2.23 제135호 /505
- '준법서약제폐지' 주장에 가석방 취소 /99.11.16 제172호 /656

## 8. 사생활 / 개인정보 침해

### <사찰>

- 국민의 알 권리,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발표-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가능성도 있어 /94.12.26 제3호 /90
- 조작사건에 이어 프락치사건 발생-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 강력반발 /95.9.25 제39호 /160
- 사찰자료 정보공개 청구-7개 사회단체 전북경찰청장 앞으로 /98.12.22 제127호 /473
- [자료] 성명서-정부는 안기부를 통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99.1.5 제129호 /484
- 불법사찰도 비공개 자료? -사회단체들,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준비 /99.1.19 제131호 /490
- 불법사찰 비공개 위헌·위법-사회단체들, 행정소송·행정심판 26-27일 청구 /99.1.26 제132호 /494
- 경찰, 관명사칭 정보사찰-"구청 총무과 이×× 주사다" /99.5.11 제146호 /553

### <도·감청>

- 문민정부 일상적인 도청자행-출소장기수 장풍 밑에서 도청장치 발견 /95.6.5 제24호 /131
- 재야노동연구소에서 고성능도청기 발견돼 /95.10.2 제40호 /161
- 더 무서운 '합법'-도청같은 감청 부쩍 늘어 /98.10.19 제118호 /435
- 통신비밀보호법 보완해야 /98.11.10 제121호 /446
- "긴급감청제도 폐지해야"-민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의견서 국회·각 당 제출 /98.12.8 제125호 /463
- 통신공간 감청도 심각 /99.9.20 제165호 /628
- 경찰, 노조간부 부인 통화도 감청 /99.10.5 제166호 /631

### <전자주민카드>

- 정의평화정보센터INP 결성-전자주민카드시행 반대에 대한 설명회도 가져 /97.4.1 제66호 /227
- 정의평화정보센터,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내무부장관 앞으로 의견서 제출 /97.4.1 제66호 /227
-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97.5.17 제69호 /238
- 도내 전자주민카드 반대 움직임 활발 /97.5.17 제69호 /238
- 전자주민카드, 민주주의 기본 흔든다-전자주민카드 반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 /97.6.18 제71호 /241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발제문 /97.6.18 제71호 /242
-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공청회 평가 및 이후 방향에 대한 간담회 /97.6.18 제71호 /243
-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본격화-사회단체, 주민카드반대 공대위 발족 /97.7.31 제73호 /249
- 전자주민카드를 막아내자-전북도의회 전자주민카드 '98예산책정에서 제외 /97.10.30 제78호 /269
- 험난한 정보민주화의 길-통신연대, 전자주민카드 등 10대 사건 선정 /98.1.5 제80호 /279
- 전자주민카드 백지화-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돼야 /98.2.3 제82호 /289
- 다시 고개드는 전자주민카드-공대위, 행정자치부에 강력 항의 /98.6.21 제102호 /371
- 다시 고개드는 전자주민카드-행자부, 감사원 권고 불구 예산신청 등 강력 추진 /98.8.3 제108호 /393

- 전자주민카드 왜 미련 못버리나-전북공대위, “완전 폐지” 주장 /98.9.29 제116호 /428
- 전자주민카드 입법추진-행자부, 이번 국회에서 입법추진 /98.11.10 제121호 /448

#### <주민등록/지문날인>

- 이제 정보독재 시대마저 도래한다-내무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7.3.7 제65호 /221
- 모든 국민은 예비범죄자?-정부 새주민증 위해 지문강제채취 /99.6.1 제149호 /563
- 통합·전산화되는 주민증, 정보사회파시즘 위험-정보통신연대 INP ‘주민전산화’ 토론회 /99.6.15 제151호 /572
- “지문날인을 거부한다”-각계인사 성명·‘운동본부’ 결성될 듯 /99.7.6 제154호 /583
-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2차 선언자 대회 /99.7.20 제156호 /593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99.7.20 제156호 /593
- “지문날인은 반문명 제도”-지난주 도내 첫 ‘지문날인 반대’ 캠페인 /99.7.27 제157호 /595
- 거부해도 땀땀하다-인권단체들, 지문날인 거부 서명자 모집 /99.7.27 제157호 /596
- 주민증 갱신 강요-게시·방송까지 “너무한다” /99.8.2 제158호 /601
- 사람을 찾습니다-지문날인 헌법소원 /99.8.24 제161호 /613

#### <기타>

-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검열시작-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심의규정마련 /95.4.17 제17호 /118
- 인권유린 논란 불온통신 규제 철회 /97.2.1 제63호 /215
- 벌과금 받아내려 주민등록 말소-금융기관의 목적 벗어난 이용 ‘기본권 침해’ 논란 /98.4.13 제92호 /327
- ‘불법 불심검문’ 불복중운동 확산-서울대 총학생회 경찰서장 고발, 인권단체 ‘법대로’ 거리캠페인 /98.4.20 제93호 /333
- 불심검문 피해 국가배상청구-대학생 5명, 각 5백만원씩 청구 /98.10.12 제117호 /430
- ‘직원선동, 불미’ ...악선전에 신상정보까지 빼내 감시 /99.3.9 제137호 /514

### 9. 집회와 시위의 자유(표현의자유)

- AI, “조문”관련 대량구속-‘표현의 자유’ 침해우려 /94.7.25 준비4호 /59
- 민교협 교수의 인권긴급토론회-‘학문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같이 인정돼야’ /94.10.24 준비13호 /72
- 국내인권문제관련,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가보안법 등 조사항동 예정 /95.5.15 제21호 /125
-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인권단체 토론회, 국보법·제3차 개입금지 철폐요구 /95.7.3 제28호 /138
-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97.2.27 제64호 /217
-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안 국회통과 /99.5.4 제145호 /549

- 각계 인사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여론수렴 위한 공청회부터 거쳐야” /99.5.18 제147호 /558
- 새정권 들어 집회·시위 자유 악화-<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99.6.8 제150호 /569
- 집회 제한 대폭 강화-집시법시행령 구호·확성기·유인물 등 제한 /99.10.26 제169호 /643
- <자료> 집시법의 주요내용 /99.10.26 제169호 /643

### 10. 감옥의 인권

- 조작간첩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천주교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95.2.13 제8호 /100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구타호소 자살 /95.4.17 제17호 /118
-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 교도소-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95.5.8 제20호 /123
- 미결재소자 출결 옷으로 겨울지내-법무부, 졸속 행정이 빛은 인권침해 /96.1.17 제49호 /177
- 구태의연한 교도행정-군산교도소 ‘양심수 이동주씨 실명위기’ /96.12.15 제61호 /203
- 군산교도소 이동주씨 수술비 국비로-교도소 관계자 “수형자는 관비가 원칙” /97.2.1 제63호 /213
- 가혹행위 폭로 재소자, 전주교도소장에 행정소송-“불법 행위 은폐 위해 긴급이송” /98.3.9 제87호 /307
- 법원, 가혹행위 전주교도소 손들어줘-교도소에 행정소송 재소자 패소 법원, 교도소 가혹행위엔 ‘모른체’ /98.5.4 제95호 /341
- 전주교도소 미전향수 접견제한-뚜렷한 기준업이 접견제한, 생필·의약품 차입도 제한 /98.5.25 제98호 /352
- 전주교도소 새 소장 김정제씨 부임 /98.7.13 제105호 /382
- 자살발표 곳곳 의문투성이-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의혹 수두룩 /98.12.8 제125호 /461
- 감옥 인권실태 공개 /98.12.22 제127호 /473
- <자료요약> 한국 감옥의 현실: 감옥 인권실태 조사보고서-“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 /98.12.29 제128호 /479
-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미궁-‘자살’ 끈 교도소가 불태워 /99.1.19 제131호 /489
- “교도소 답변 못민는다” - 평화와인권, 은폐의혹 다시 제기 /99.2.2 제133호 /497
- 재소자 우편물 ‘꿀꺽’ - 군산교도소, ‘인권지침’ 담긴 책자 출소날 내놔 /99.2.9 제134호 /501
- 교도소 의문사 조사단 구성 /99.3.23 제139호 /521
- 전주교도소 조사단 방문 거절 -천주교사제단·평화와인권 등 항의서한 전달 /99.3.30 제140호 /526
- 안풀린 의문사 진상-‘평화와인권’ 교도소장 상대로 소송 /99.7.27 제157호 /595
- 공안사범 길들이기 패싸움 유도-부산구치소 재소자, 변호사 통해 양심선언 /99.8.31 제162호 /616

### 11 언론의 자유

- 평화신문의 냉전논리-‘빛고을’ 광주대교구보 논평 /94.7.6 준비2호 /55
- “편집방향 제검토 촉구”-사제단, 평화신문 발행인에게 /94.7.25 준비4호 /59
-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 축소은폐보도 규탄 /95.5.8 제20호 /124
- 언론의 반성없이 민주개혁 없다! /95.12.11 제45호 /170
- 민언협이 주장하는 ‘언론개혁 10대 과제’ /98.2.3 제82호 /288
- “개혁방송” 좌초위기 - 조선일보 반발 두려운 KBS 사내 안기부 고리도 한문 /98.5.11 제96호 /345
- 민변, 정간법 개정 촉구-“재벌의 언론소유 제한” 등 국회의장에 보내 /99.10.12 제167호 /636

## 12. 기타

- 더많은 사형집행 우려-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94.10.10 준비10호 /67
- 나를 관찰하는 이유 밝혀라-보안관찰 피처분자 집단적 정보공개청구 채비 /99.10.12 제167호 /637

## 13. 건강권

- 군산시민의 충치예방을 위하여 상수도 불소화를 추진하는 시민모임 출범식 /95.4.17 제17호 /118
- 병원인력감축 환자만 붕!-도내 보건의료노조 일제히 파업 예고 /99.5.11 제146호 /551
- 정부 구조조정안 철폐-전북대병원·남원의료원 /99.5.18 제147호 /555
- 보험료 인상 철회 촉구-의보연대 정부대책 촉구 성명 /99.6.1 제149호 /563
- “의보통합해야 건강권 찾는다”-민주노총·농민 연대집회 이어 통합연기 반대 성명 /99.10.19 제168호 /639
- <성명서> 정부·여당은 의보통합시행연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99.10.19 제168호 /642

## 14. 교육

- 5세아 취학반대, 유치원 공교육화를 /95.10.2 제40호 /162
- 고교입시 성차별, 평등권 위배-고입점수 높은 여학생이 불합격하는 것은 불평등한 정원 때문 /96.1.17 제49호 /178
- “익산시 고교입시 평준화하라”-익산시 교육, ‘인재양성’에 빼앗긴 평등교육권 /98.3.16 제88호 /313
- 익산 평준화 공청회 ‘성황’-고교생에서 초등학교까지 입시전쟁 내몰려 /98.4.13 제92호 /328
- 평준화 요구 불투명 - 익산이어 군산, 교사가 앞장서 /98.5.11 제96호 /344
- 어두운 먼 왜 들추냐-교총, 영화 「여고괴담」 반대운동 /98.6.15 제101호 /367
- 비리폭로 교직원 해임-도교육청, 이용호씨 징계 보복성격 짚어 /98.6.21 제102호 /369
- 이용호씨 해임에 대한 전교조 전북지부 논평(요약) /98.6.21 제102호 /369
- 평준화 즉각 실시 여론 비등-도교육청, “연내결정” 되풀이 /98.9.7 제113호 /415

- 소규모학교는 구조조정 희생양-31개 교육시민단체, 대규모 항의집회 /99.7.6 제154호 /584
- 국회 통과 앞둔 국민의 정부 악법들-사립학교 등 교육관계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인권위원회법안 /99.8.17 제160호 /609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교육①BK 21 무엇이 문제인가? /99.8.24 제161호 /614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교육②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변화 /99.8.31 제162호 /617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교육③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변화 /99.9.7 제163호 /621
- 교육개혁 ‘전북운동본부’ 발족-전교조 전북지부 등 17개 단체 가입 /99.12.7 제175호 /668
- ‘전북교육운동본부’ 발족-11일, 전교조 등 24개 단체 참여 /99.12.14 제176호 /671

## 15. 노동

### <노동>

- 노동계 “3차개입 금지는 독재시대 유물”-공권력 투입, 언론편파보도 / 94.7.1 준비1호 /54
- 철도, 지하철 보복징계, 재파업 부를수도-징계 총 3270명, 노조활동 ‘목조르기’ /94.8.1 준비5호 /61
- 세계가 손가락질한 노동정책-국제언론인연맹 정부에 항의, 가톨릭단체 인권문제 무관심 /94.8.1 준비5호 /61
- 미국산 자동차 강제사용 항의-전노대 “관용차 미국제 사용압력 부당” /94.8.29 준비6호 /62-2
- 노동법 개정 연내 어려울 듯-남재희 장관 회견 “복수노조 허용 어렵다” /94.8.29 준비6호/62-2
- 복직판결 노동자 출근지시, 폭행-전주대성전자, 중앙노동위 명령거부 /94.9.5 준비7호 /64
- 중소기업 체불임금 크게 늘어 /94.9.5 준비7호 /64
- 노동문제 중재 나선 종교계-보복성 불써 안은 철도·지하철 문제에 의견표시 /94.9.12 준비8호 /64-2
- 한국노동시간 세계1위-생산성은 25위로 낮아, 국제경영개발연구소 분석 /94.9.26 준비9호 /65
- “현중노조간부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민주노총 건설 방해의도” /94.10.10 준비10호 /68
- 노인병원 폐업 부당노동행위 판결 /94.10.24 준비13호 /72
- [전북청년노동자집] 이리 송학동 성당-가족, 동료 등 150여명 참석 /94.11.29 준비18호 /79
- 강원 고한 광부들 9일째 갇힌농성-폐광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 요구/95.1.6 제4호 /92
- 파업 회사에 통보한 노조간부 구속 /95.2.20 제9호 /101
- 파업지시 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국가안보 평계로 인권유린하는 태도 여전 /95.2.27 제10호 /104
- 근로자 단결권 위협하는 직장폐쇄 위법판결 /95.3.6 제11호 /106
- 박복실(요안나) 3주기 추모미사-전북지역 노동자들, 당당하게 살았던 고인의 뜻 기려 /95.3.13 제12호 /108
-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 비준계획 발표 /95.3.20 제13호 /109

- 경찰, 해고노동자 무차별 폭행, 입원중 환자 강제연행-노동절을 맞아 전국적인 복직투쟁 지지위해 /95.4.24 제18호 /119
- 3자개입 선언으로 노동운동탄압 정면돌파-경기남부지역 80여 노조·노동단체 노동탄압에 공동대처 /95.5.8 제20호 /123
- 정부, 국가안보위협 빌미로 강경탄압-한국통신 노동자 3명 구속, 14명 사전구속영장발부 /95.5.22 제22호 /127
- 노동운동탄압 분쇄선전전 /95.5.29 제23호 /130
-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저지 위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95.6.5 제24호 /132
- 정부의 한국통신 노조탄압에 종교계 등 강경대응 확산-전북지역 공권력 남용 규탄 결의대회 가져 /95.6.12 제25호 /133
-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행위'-노동인권위, 김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서명운동 시작 /95.6.12 제25호 /133
- 대통령탄핵서명 본격화-노동인권대책위, 20일부터 /95.6.19 제26호 /135
- 박홍총장 망언 서강대 총학생회 단식농성-한국통신 가족 농성합류 /95.6.19 제26호 /136
- 고 박삼훈씨 장례식 열려-회사측, 장례참석 방해하기도 /95.7.3 제28호 /137
- 최저임금은 임금억제의 보수수단-올 최저임금 28만 8천 1백 50원 /95.7.10 제29호 /139
- 전북노동자들 힘모아-노동자통일대 '녹두' 발대식 /95.7.31 제32호 /146
- 전북지역 3개 노동조합 장기파업 계속-한국베트로텍스 직장폐쇄 /95.7.31 제32호 /146
- 진보언론 '말' 월권행위로 노조위원장 징계 /95.8.28 제36호 /154
- 3자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유엔인권이사회, 정부에 개정요구 /95.9.18 제38호 /157
- 계속되는 죽음-노점상 이덕인씨 죽음 이어 수배노동자 조수원씨 자살 /95.12.18 제46호 /171
- 노동자들, 신한국당 쇠사슬 항의투쟁-병역특례노동자 고 조수원씨 사망 항의 /95.12.18 제46호 /171
- 정부 노동운동탄압 국제적 논란-민주노총, ILO에 정부제소·OECD 노조자문위, 노동법개정없이 OECD 가입 불가능 밝혀 /95.12.26 제47호 /173
- 최태일 본부위원장의 어용성과 노조전임자 축소가 문제-21일 장례 한일병원 고 김시자 위원장 분신원인 /96.1.10 제48호 /175
-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 씨, 유가족이 화장 /96.1.10 제48호 /175
- 한국표준생계비, 3.2인당 189만원-민주노총 발표, 임금은 52만원정도나 모자라 /96.1.17 제49호 /177
-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분신 김시자씨 죽음-"한국전력 어용노조 퇴진운동" 불붙어 /96.1.17 제49호 /179
- 원진레이온 실직노동자 사망-공사장서 화상 입어 /96.1.17 제49호 /179
- 제106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성황리에 열릴 예정-5월 1일, 12시부터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앞에서 /96.4.24 제55호 /191
-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원회〉 전북지역에서도 5월 1일 1차 국민대회 /96.4.24 제55호 /192
- 조수원열사 추모사업회 30일 창립, 발기인 모집 /96.4.24 제55호 /194

- 전북노동교육원 추진위원회 활동시작 /96.11.30 제60호 /200
- 민주적 노동법 개정과 대학노조 탄압저지 전북도민대책위 본격활동 시작 /96.11.30 제60호 /201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를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단체 노동법 개악저지결의 높아져 /96.12.15 제61호 /206
- 국민을 짓밟은 김영삼 독재정권!-총파업투쟁 범국민 싸움으로 /97.1.4 제62호 /209
- 안기부법·노동법 반대-전북지역 시민참여 불붙어 /97.1.4 제62호 /210
- 성명서 : 이른바 날치기 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신한국당과 김영삼정부에 대한 범국민적인 항쟁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97.1.4 제62호 /212
- 교수들 농성돌입-악법철폐 민주적 개정 촉구 /97.2.1 제63호 /213
- 고 박복실 동지 추모미사 /97.3.7 제65호 /223
- 노동법 개정의 기본정신과 쟁점에 대한 사제단의 견해 /97.3.7 제65호 /224
- 노동인권의 현황과 이후 과제-인권학교 강연요지2 /97.5.1 제68호 /234
- 정부, 근로자파견제 2월 도입키로-중간착취 고용불안 심화 우려 /98.1.19 제81호 /285
- <성명서> 반개혁적 광인집단,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총파업과 집회를 철회하며 /98.2.16 제84호 /296
- 노사정합의 파기 법안통과에 노동자 분노-"합의안보다 다섯배 정도 후퇴" /98.2.23 제85호 /300
- "그 불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11일에 고 박복실 열사 뜻 기리는 6주기 추모식 /98.3.9 제87호 /308
- "과거 권위주의 회귀 우려"-국제사회, 파업진압 관련 한국정부 비난 /98.7.20 제106호 /385
- "울산 현자, 용역강제 모집"-용역업체 면접까지 받은 두명으로부터 제보 /98.8.17 제110호 /402
- 구속 노동자 김영삼 때보다 많다 /98.8.31 제112호 /411
- 벼랑끝 선 은행노동자들-파업 앞두고 '반국가사범'으로 찍혀 /98.9.29 제116호 /428
- 노조설립 불구, 사측 '버티기'일관-대우상용차사무연구노조, 사측 노조와해 공작 직면해 총력투쟁 /98.12.22 제127호 /474
- 적자타령에 국민건강권 침해-전북대병원 통해 본 국립대병원 구조조정 /99.2.9 제134호 /502
- "안싸우면 희망없다"-도내 건설노동자 들고 일어나 /99.3.9 제137호 /515
- 군산노동부·경찰, '노동자탄압' 공조-항의민원 노동자 모두 연행 ...1명 구속, 3명 입건 /99.3.23 제139호 /523
- 군산은 지금투쟁중...②군산지역 카캐리어 노동조합 /99.4.13 제142호 /536
- CBS 노조 무기한 전면파업-6일부터, 생존권 보장-부실경영자 문책 요구 /99.4.13 제142호 /537
- 강압에 꺾인 노동자 생존권-정부 총체적 탄압에 지하철파업 막내려 /99.4.27 제144호 /543
- 지하철파업지지 각계 성명서 /99.4.27 제144호 /545
- '사장퇴진' 요구-CBS노조 /99.5.4 제145호 /549
- 노사 개혁특위 구성 등 합의-〈기독교방송 노조〉파업철폐 /99.5.11 제146호 /552
- 근로감독관 농성장에 음주운전 질주-노동자들 편파행정 항의 단식농성 /99.5.11 제146호 /553
- 생존권 쟁취! 민중연대-99년 1차 전북지역 민중대회 /99.5.18 제147호 /556
- '불법'에는 공정한 엄단?-악덕사업주 구속보도에 이은 노동운동가 구속보도 /99.5.25 제148호 /559

- 파업권 보장· 정부 강경대응 철회"-민변 대정부 시국건해 발표 /99.6.1 제149호 /564
- 군산노동부 앞 80일 천막철수<연대투쟁 통해 일부 복직약속 등 승리> /99.6.15 제151호 /572
- <비대위가 밝힌 김·경의 '노동탄압공작' 사례> /99.7.13 제155호 /588
- 말로는 사면 몸으론 탄압-김대통령 '자유메달' 수상 이후 /99.7.13 제155호 /589
- 대호물류 군산출장소장 실형 선고-사장은 도피행각· 풀어야 할 문제 산적 /99.8.2 제158호 /600
- 연대의 힘으로 승리-군산카캐리어노조, 전원복직! /99.9.14 제164호 /624
- "연대해서 풀자"-투쟁사업장 연대집회 가져 /99.9.14 제164호 /625
- 노조비리· 불법 위협수위-J여객 위원장 횡령 피소-'퇴진' 물려 /99.10.5 제166호 /631
- "파업보도 불공정"-한라중 노조 '입장' 발표 /99.10.19 제168호 /639
- 목살당한 노동자 단결권-익산시 노조신고증 교부않고 문서위조 의혹 /99.11.16 제172호 /655
- "전력산업 분할· 매각 반대"-전력 공대위' 명동성당 농성 /99.11.30 제174호 /665
- 한국통신, 노조선거 개입의혹 /99.12.14 제176호 /673

#### <신자유주의>

- 노동자, UR비준반대-여론투표 90% 한목소리 /94.7.25 준비4호 /60
-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재정요구-UR비준 강행철회, 케케묵은 이념시비 중단 /94.8.1 준비5호 /62
- "지금은 진보적 사회운동 더 절실할 때"-사회단체들 참여 운동진로 모색 간담회 /98.3.23 제89호 /316
- "NO! MAI" 지구적 연대행동을!-다자간 투자협정 비밀리 진행, 초민족자본에 무제한 자유 보장 /98.4.27 제94호 /336
- 반민중적 IMF 구조조정 협약 수용 반대시위 /98.6.7 제100호 /360
- IMF협약 폐기하라-운동본부, IMF 서울사무소 항의방문 /98.6.15 제101호 /365
- 공기업 매각 경제파산 초래-전북본부, 민영화 반대성명 /98.6.15 제101호 /365
- "반민중적 구조조정 안된다"-양대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 /98.7.13 제105호 /383
-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반대-전북노동자, 파업·도지사에 항의서한 전달 /98.7.20 제106호 /385
- 서울국제민중회의 선언문-'신자유주의 맞선 세계 민중연대' 결의 /98.9.14 제114호 /420
- "독점자본 강화하는 구조조정 반대" /98.12.15 제126호 /467
- "구조조정 반대 민중연대"-99년 1차 민중대회 15일 열려 /99.5.11 제146호 /552
- "또 하나의 불평등 협정"-민교협, 한미투자협정 반대 성명 /99.6.29 제153호 /580
- "WTO가 가난한 사람 만든다"-민중연대회의, WTO 뉴라운드 중단 촉구 /99.12.7 제175호 /668

#### <노동시간단축>

- 신정연휴 축소 중단하라 /98.12.8 제125호 /464
- "법정노동시간 줄여야 한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99.10.26 제169호 /644
- 민노총 익산역 천막농성-18일 국회폐회까지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등 요구 /99.12.14 제176호 /674
- 2000년엔 주5일 근무를-민노총 개혁입법 처리 촉구 /99.12.21 제177호 /675

#### <노동탄압>

- 교섭거부하고 무차별 경찰투입 /94.7.6 준비2호 /55
- 3년동안 활동해 온 노동조합 민주노조가 세워지자 등록취소?-원광의료원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취소 파문 /96.11.30 제60호 /200
- 검찰파업관련 구속대상 선별작업 돌입 /97.1.4 제62호 /211
- 21세기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전북지역 87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식' 따뜻한 분위기 속 열려 /97.10.6 제77호 /266
- "원직복직" 연대투쟁-도내 연일 공안검찰·경찰 규탄대회 /99.7.20 제156호 /591
- 경찰, 노조간부 부인 통화도 감청 /99.10.5 제166호 /631
- "한라중 공권력 투입반대"-전북민중연대회의의 성명 /99.10.26 제169호 /645

#### <노동감시>

- 시내버스 CCTV로 감시 후 징계-조기출발 이유, 노조간부만 10여명 3일 정직처분 /98.6.15 제101호 /367
- 전주, 버스CCTV로 다섯명 해고-지난 3월 '렌즈가렸다'수상하다'등 이유 /98.7.6 제104호 /378
- 노동감시 새기술 도입 말썬-현대자동차전주공장, RF 카드 일방적 지급 체비 /99.1.12 제130호 /485
- 노동감시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작업장 사생활 포기 말아야" /99.1.19 제131호 /491
- 현대차 전주 RF 카드 도입-노사 서면합의 -공대위 "노조집행부 불신임" /99.1.26 제132호 /493
- "노동감시 반대!"-정보통신연대 INP 캠페인 돌입 /99.2.2 제133호 /499
- 노조, 감시·공작 대상 여전-현자서비스 97년 치밀한 직원사찰 자료 들통 /99.9.14 제164호 /624

#### <보건의료>

-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 창립 /98.4.13 제92호 /328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보건의료①김대중정부 공약 얼마나 지켰나 /99.9.14 제164호 /626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보건의료②'이상관투쟁' 통해 본 노동보건운동 /99.10.5 제166호 /634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보건의료③민중의료연합 강동진 대표 인터뷰 /99.10.12 제167호 /638

#### <산재>

- 산재보험 재정운용-"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돼야" /94.7.25 준비4호 /60
- 전주지역 재해발생률 증가-제조업 217명 /94.8.1 준비5호 /61
- 산재환자 최저보상기준액 1일 1만7천6백9원 /94.8.29 준비6호 /62-2
- 회사지정병원 '직업병'판정 의문-대우조선노조,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요구 /94.9.5 준비7호 /64
- 10명의 목숨 앓아간 탄광사고 또 발생 /94.10.10 준비12호 /70
- 94년 산재사망자 사상최고-작년한해 2천3백18명 사망 /95.1.23 제6호 /96
- 전북지역 산재관련 '노동자실문조사 보고서' 발간 /95.3.13 제12호 /108

- 전북노동자 입단투 전진대회-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5인미만 사업장 등 포함하면 두배는 될 것" /95.4.17 제17호 /117
-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를-산재장애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 /95.7.24 제31호 /143
- 드디어 올것이 왔는가-군산 TDI공장 폭발사고! 노동자 이안구씨 처참한 죽음 /96.2.14 제51호 /185
- 민주노총 유구영씨 간암 판정 투병중 /96.2.14 제51호 /186
- 위협받는 노동자 '안전권'-안전관리자 계약직화 추세 /98.9.14 제114호 /420
- 책임회피에 폭행까지-고 이상관씨 유족들, 규탄 철야 농성 /99.8.10 제159호 /605

#### <여성노동자>

- 여성노동자 여전히 저임금-불안정고용도 큰 문제 /94.7.14 준비3호 /57
-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94.12.26 제3호 /90
- 여성노동자 인권확보와 평등사회 수립을 위하여-전북여노회 창립식 가져 /97.5.17 제69호 /239
- '지방자치시대의 여성' /97.6.18 제71호 /243
- <현장의 소리> 정리해고의 희생양, 오! 그대 여성. /98.1.19 제81호 /285
- 여성노동자 90% "채용차별 겪어왔다"-전북여성노동자회 도내 남녀 고용실태 설문조사 /98.2.16 제84호 /297
- 현자, 여성조합원부터 정리해고 도마에 /98.8.31 제112호 /410
- 전국여성노조 29일 창립-비정규직 일용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목표 /99.8.24 제161호 /611
- 70%가 '노동조합 필요' 응답-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현황 발표 /99.10.19 제168호 /640

#### <이주노동자>

- 노총, 외국인노동자 수입증지 요구-국내 유휴노동력 활용정책 촉구·합법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보다 더 나빠 /94.9.12 준비8호 /64-2
-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4.10.10 준비10호 /68
-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토론회-각종 혜택에서 제외 현대판 노예로 전락 /94.10.31 준비14호 /72-1
- 네팔노동자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항의농성-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 정식발족 /95.1.16 제5호 /93
- 중국 교포들 인권문제 심각하다-'불법체류' 올라미로 인권유린 빈번 /95.1.30 제7호 /98
- 검찰 외국인 노동자 돕기 방해-'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소장 소환조사 /95.1.30 제7호 /98
-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해결, 근본적인 대책 필요 /95.2.20 제9호 /102
- 불법이탈 외국인 연수생 검거자 포상제 백지화 /95.2.27 제10호 /103
-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95.3.27 제14호 /112
- 외국인노동자 갈 곳이 없다-외국인 노동자 인권공대위, 항의방문, 집회 등 계속 /95.4.3 제15호 /114
- 김재오씨 등 필리핀 방문 /95.4.24 제18호 /119

-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보상청구-'귀향모임', 1년여동안 사례수집 /95.10.9 제41호 /164
- 남한은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중국교포 노동자들,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95.12.18 제46호 /172
- 기독교, UN인권소위 외국인노동자인권탄압 폭로 /96.8.7 제57호 /196
- 맘의 대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97.10.6 제77호 /268
- 국회 통과 앞둔 국민의 정부 악법들-사립학교 등 교육관계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인권위원회법안 /99.8.17 제160호 /609

#### <실업·해고>

- '이랜드' 그룹 노조원 해고투쟁 43일째 /95.5.15 제21호 /126
-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노동부 경총,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강력반발 /95.7.17 제30호 /141
- 전해투, 병역특례 해고자 국방부 항의방문 /95.10.2 제40호 /161
- 해고자 명동성당서 쇠사슬 묶고 단식농성 /95.12.26 제47호 /173
- 도내 대량실업 전국2위 4.2%-임금체불 관련 고소고발 폭증 /98.3.16 제88호 /312
- "실업자도 노동자"-도내 실업자운동 태동 조짐 /98.3.23 제89호 /317
- 실업자 운동은 일어날 것인가-정부·차지단체 사업주 편들기에 실업자운동 조직될 듯 /98.3.30 제90호 /319
- 정부, 실업 해결 의지 없다-전북 사회단체, 실업문제 토론회 /98.5.4 제95호 /340
- 절반이상이 98년이후 실직-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실업급여 신청자 대상 설문 /98.5.11 제96호 /344
- 고용실업대책 운동본부 출범-전북사회운동단체, 민중생존권 보장 등 위해 활동하기로 /98.5.25 제98호 /351
- '고용실업대책 전북도민운동본부'발족 선언문 요약 /98.5.25 제98호 /351
- 동정말고 일자리를!-군산실업연대(준), 전북최초 실업자 조직운동 /98.6.1 제99호 /356
- 노동자 숨통되는 정리해고-군산 한화노동자 '생존권보장'요구하며 상경 농성 /98.6.7 제100호 /360
- 실직자·북한동포 돕기 평화행진-'실직자 생활조례' 제정 촉구 /98.6.21 제102호 /370
- "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외면말라"-고용실업대책본부, 매주 금요일 거리서명 /98.7.13 제105호 /383
- 전라북도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①: 실직근로자의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에 관한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98.7.27 제107호 /391
- 전라북도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②: 실직근로자의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에 관한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98.8.3 제108호 /395
- 전라북도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③: 실직근로자 생활실태 및 구직활동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98.8.10 제109호 /398
- 정리해고, 속셈은 댄 곳에-태령, 이윤은 넘치고 노조원은 자르고 /98.8.24 제111호 /405
- 해고통보 줄짓는다-도내 노동자 정리해고 맞선 파업 잇달아 /98.8.31 제112호 /410
- "실업노동자 인권 보장하라"-고용실업대책 전북본부, 최초 실업노동자 거리행진 /98.9.14 제114호 /418

- '실업자 생활지원조례안' 도의회 청원 /98.9.21 제115호 /422
- 정부가 실직자 도와야-전북 고용실업본부, 전국최초 실업자 생활지원조례 청원 /98.9.29 제116호 /425
- 정리해고 비판자살-뇌성마비 동생도 살해 /98.10.19 제118호 /434
- [광고] 도내 민간차원 실업자 지원활동 /99.1.26 제132호 /494
- 공공근로 임금 또 깎다니-전북지역 노동단체 성명서 내 /99.2.9 제134호 /503
- 삭감이 아닌 확대를!-공공근로 임금, 도지사 항의 방문 /99.2.23 제135호 /506
- 실업자도 뭉치자-첫 실업자 학교 큰 호응 ...나도 실업자 /99.3.23 제139호 /523
- <자료요약> 저소득층 및 실직노동자 실태조사-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분석 /99.9.20 제165호 /629
- <토론회> 전주지역 실업자와 건설노동자 실태조사-장기실업·불완전고용 문제 심각 /99.10.5 제166호 /633
- 대책없는 내년 실업대책-국방 치안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 /99.10.19 제168호 /639
- "실업자도 평등한 시민"-'권리선언' 등 새 발걸음-전주실업자학교 /99.11.2 제170호 /647
- <요약> 실업자 권리선언 /99.11.2 제170호 /648
- "실업예산 오히려 증액해야"-도내 실업단체들 상경투쟁·각계 서명 전달 /99.11.30 제174호 /663
- <성명서> 실업예산 삭감에 결사 반대한다. /99.11.30 제174호 /663
- "실업자에는 사형선고"-'정부 실업예산삭감' 반대 시위 /99.12.7 제175호 /669

#### <민주노총>

-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발족-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94.11.14 준비16호 /76
-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95.6.26 제27호 /136-2
- 3자개입금지 철폐-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95.9.25 제39호 /159
- 정부와 민주노총 대립 격화-권영길위원장 구속, 대화상대 불인정 /95.11.27 제43호 /166
-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96.1.24 제50호 /184
- 권영길위원장 석방 국제캠페인 강화-국제자유노련, 3월 11일 방한 /96.2.28 제52호 /188
- 아직도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망령이 남아 있다니-관계기관 대책회의,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노동절 행사 방해 /96.4.24 제55호 /191
- 민주노총·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폐법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97.2.27 제64호 /218
- "고용안정 위해 총파업 불사"-민주노총 9월말부터 비상총회 열어 총파업 결의하기로 /97.9.19 제76호 /263
- 정리해고 철폐·재벌체제 개혁-민주노총전북본부, 정리해고 도입하면 강력 투쟁 /98.1.19 제81호 /283
- "생존을 위한 싸움"-노동계 '고용안정' '민중생존권' 사수투쟁 벌이기로 /98.4.20 제93호 /332
- 전북 노동자 1차 총파업 단행-6개 사업장 4,500여명-노동자 위력·시민호응 확인 /98.6.1 제99호 /356
- "약속지킬 의지있다"-민주노총 전북, 국민회의 농성 /98.12.29 제128호 /477
- 잘못된 진단, 빛간간 처방-민주노총 전북지부 청문회 규탄 /99.2.2 제133호 /499
-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고삐-군산 문제 물려 열기 고조 /99.3.30 제140호 /526
-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발족 /99.4.13 제142호 /536

- "정리해고 중단하라"-민주노총 4-5월 총력투쟁 결의 /99.4.20 제143호 /539
- "지하철 파업 정당하다"-민주노총전북본부 대정부 총력투쟁 결의 /99.4.27 제144호 /544
- 파업기획도 모자라서-국민회의 항의방문 7명 강제연행 뒤 석방 /99.6.15 제151호 /571
- 전북 노동자 단식농성-"정리해고중단, 검찰공작 사과하라" /99.6.22 제152호 /575
- <현장스케치>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99.6.22 제152호 /575
- 일본 산별노조 방문-"민주노총 등과 연대 지속" /99.11.16 제172호 /655

#### <전교조>

- 전교조 관련, 8명 임용대상 제외 /94.8.29 준비6호 /62-1
- 문화행사 참가교사에 서울 교육청, 경위서 요구 /95.5.22 제22호 /128
- 여전히 침해받는 교사들의 권리-서울시 교육청, 교육개혁선언 교사 증정계 방침 /95.6.12 제25호 /134
- 교육개혁 선언정계-전교조 비난성명 /95.8.7 제33호 /148
-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전교조 /97.2.27 제64호 /218
- 해직교사도 준법서약해야? /98.7.20 제106호 /386
- 상록수 가르친 교사 파면-서울 영신여실고, 전교조 교사 탄압 /98.8.24 제111호 /406
- 학내에선 활동 못한다?-도교육청 학교장에 공문 시달 /99.7.27 제157호 /595
- 교육관행 해결 쉽지 않을 듯-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청과 첫 교섭 /99.9.7 제163호 /620
- 줄속 교원수급정책 철폐 요구-전교조 전북지부 초등교사 결의대회 열려 /99.10.12 제167호 /637
- 교육현안 외면 단체교섭 안된다-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 규탄농성 돌입 /99.10.26 제169호 /645
- "교육청 교섭의지 희박"-전교조 '성실교섭' 촉구 /99.11.2 제170호 /649
- 전교조 전북지부 비리고발 접수-사학운영 교원인사 등 고발창구 통해 접수 /99.11.30 제174호 /665

#### <전북대노조>

-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거센 탄압 맞서온 전북대노조 '결성10주년' 맞아 /99.7.6 제154호 /583
- 전북대, 아전인수식 '단협해지권' 해석-전북대 노조 5개월째 파업 /99.12.14 제176호 /673

#### <기아특수강>

- 노조지도부가 정리해고 들먹-군산 기아특수강노조, 선거 앞두고 조합원 협박 /98.7.13 제105호 /381
- 농성투쟁 중 '우발사고'-군산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20명 무더기 기소 /98.10.19 제118호 /434
- 부당해고 맞선 힘겨운 싸움-기아특수강 해고자들 50일 넘게 농성투쟁 /98.11.17 제122호 /449
- 기아특수강 구속자 첫 재판-'감금' 등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98.12.15 제126호 /467
- "새해에도 열심히 투쟁해야죠!" -기아특수강 천막농성 100일 /99.1.12 제130호 /485
- [공판안내] 군산기아특수강 구속노동자 제2차 공판(구형) /99.1.12 제130호 /486
- "정리해고 억울...수용못해" 최후진술-기아특수강 구속노동자 공판, 검사 징역3년 구형 /99.1.19 제131호 /494
- 기아특수강 석방-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99.2.2 제133호 /497

- 참을수 없는 노동탄압-노동사무소·기아특수강 유착 '문서위조' 의혹 /99.3.16 제138호 /517
- 군산노동자 투쟁 경과 /99.3.23 제139호 /522
- 노동부 '공정성' 잃었다-'단협체결했다' ...문서위조 쟁점 왜곡 /99.3.30 제140호 /525
- <기획> "군산은 지금 투쟁중"-정리해고 철퇴를 위한 기아특수강 대책위 /99.4.20 제143호 /540
- 기아특수강 체불임금 청구소송 승소-'단체교섭합의서' 위조 사실상 증명 /99.5.4 제145호 /549
-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광주청 '회신' 기만적, 농성투쟁 장기화 /99.5.18 제147호 /555
- 임금포기는 노사협의 거처도 무효-<자료>기아특수강 체불임금 소송 판결문(요약) /99.6.15 제151호 /573
- 체불임금 달라는데 폭력강제?-기아특수강, 해고자 폭행! /99.6.22 제152호 /576
- 용역강제 쓸 돈은 있나-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 자극 집단폭력사태 유도 의혹 /99.6.29 제153호 /579
- 문정현 신부 단식농성-해고자 복직·공안탄압 중지 요구 /99.7.13 제155호 /587
- "내 몸이 상해도..."-다세대 단식농성 문정현 신부 인터뷰 /99.7.13 제155호 /587
- "하늘같은 분이 어떻게..."-기아특수강(주) "면담은 아무나 하나" /99.7.27 제157호 /596
- [현장인터뷰] 기아특수강 해복투 조성옥씨 /99.8.10 제159호 /605
- 해고자 밀착 미행 의혹-기아특수강(주) 용역경비 해고자에 붙들려 /99.11.2 제170호 /647

#### <개정병원>

- 위장 휴·폐업 뒤 인수 수순?-군산개정병원 이사장의 '이상한' 휴업 /99.5.25 제148호 /560
- 서해병원 이상용 원장 폭력배 자임-노조측 협상대표자에 허리띠 휘둘러 /99.7.20 제156호 /591
- <현장인터뷰> 군산개정병원 김은혜 위원장 /99.8.2 제158호 /600

#### <현대자동차>

- 정리해고 노동자 7명 구속-현대(주) 전주공장, 해고에 고소고발 남발 /98.7.27 제107호 /389
- "지금 안 싸우면 제2, 제3의 정리해고 못 막아요"-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구속자 가족 천막농성장 /98.8.3 제108호 /393
- 구속사태 책임 발뺌-각계 대표, 전주공장 면담 /98.8.17 제110호 /402
- 현대자동차 3차공판-회사측 증인들, 증언 번복 /98.11.10 제121호 /445

#### <현대자동차서비스>

- <현장인터뷰> 현대서비스 전북지부장 박종철씨 /99.7.27 제157호 /597

#### <AP>

- 에이피투쟁, 재판투쟁으로 연장전-첫공판에서 이재경 사무국장 폭력 등 혐의사실 부인 /96.8.7 제57호 /196
- 구속된 에이피노조 조직부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96.8.7 제57호 /196

- 자본앞에 한없이 온순한 노동법-AP노동자 농성투쟁...복지투쟁 아홉달째 /97.7.7 제72호 /245
- 복직의 확실한 전제확보-AP노동자, 2심서 선고유예 /97.7.31 제73호 /249
- "근로자 가족 생활안정 우선배려" 판정-AP노조원, 구속기간동안 임금지불소송 승소 /98.4.6 제91호 /324

#### <만도기계>

- 만도기계 노조 총파업-단협 39차례, 회사 '어렵다' 일관 /97.7.7 제72호 /247
- 임금없이 더 이상 노동력 제공할 수 없다!-익산 만도기계 7일부터 파업 돌입 /98.5.11 제96호 /343
- 조합간부 다툼은대로 연행-만도기계 위원장 등 6명 연행 구속 /98.8.31 제112호 /411
- 만도사태, 노동자 분노폭발-정부, 대규모 경찰·중장비 동원해 폭력진압 /98.9.7 제113호 /413
-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익산 만도기계 구속노동자 첫 공판 /98.11.2 제120호 /441
- <요약>익산 만도기계 최후진술 요지-"가족 생계 위한 최후수단이었다" /98.11.2 제120호 /443
- 만도기계 보석으로 석방 /98.11.10 제121호 /445
- 만도기계 노조파괴 나서-노조간부 구속 이어 징계위 회부 /98.11.17 제122호 /451
- 익산 만도기계 실형 선고 /98.11.17 제122호 /451
- '잊지말자! 공권력 투입'-만도기계 익산지부 '가족과 함께' 행사 /99.9.7 제163호 /620

#### <동양차체>

- 동양차체, 노조결성에 '쇠파이프·돌 세례'로 화답-대우 노무관리팀 개입한 전근대적 노동탄압 /97.10.6 제77호 /266
- 동양차체 현장, 노조탄압으로 얼룩-탄압 규탄대회 열려 /97.12.8 제79호 /276

#### <군산대>

- 몸싸움 해고조합원 부상 -군산대, 복지투쟁 중 /98.10.19 제118호 /434
- <기획>"군산은 지금 투쟁중"-군산대 노동조합 편 /99.4.6 제141호 /532

#### <택시노동자>

- 택시노동자 권오영씨 분신 중태-'노조탄압' '야간수당체불' 등 맞서 /98.2.3 제82호 /289
- 택시노동자, 어용노조 퇴진 투쟁-노조집행부 어용행각·임금협상 결과에 분노 /98.2.10 제83호 /309
- 전북 택시노동자 '민택노련' 출범-전택노련 어용성 딛고 완전월급제 확립 결의 /98.3.2 제86호 /305
- 택시노동자 생존권 투쟁가열-민주택시 "사납금제 폐지·요금인상 반대" 투쟁 /98.3.30 제90호 /320
- 택시파업에 사장단 백기-전주 7개 회사, 수입금 전액관리제 수용 /98.11.24 제123호 /453

## 16. 노점상·빈민·주거권

-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최정환씨-16일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 규탄집회 /95.3.20 제13호 /109



-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 /95.3.27 제14호 /111
- 분신 장애인 노점상 장례식, 빈민장으로 /95.3.27 제14호 /112
- 분신철거민 박군백씨 취재기 : 영선이의 꿈을 빼앗아간 이 땅의 철거문화-고상만 /95.4.10 제16호 /116
- 무자비한 폭력철거, 철거민 인권은 어디에-폭력배 등이 주축인 [적준개발] 16개 철거구역 /95.5.15 제21호 /126
- 철거테러 공동대책위 발족-백만인 서명운동 등 펼쳐 /95.5.22 제22호 /128
- 안정된 주거권리 보장받아야 /95.6.5 제24호 /132
-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 성남시에 철거강제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 /95.6.26 제27호 /136-1
- 생존권 쟁취 결의 목동 철거민들 /95.8.7 제33호 /148
-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 구성 /95.9.18 제38호 /158
- 철거민 강제로 옷벗겨 연행-암사동 철거현장 여성주민 주장 /95.9.25 제39호 /159
- 중앙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난사-번3동 철거현장에서, 주민들 책임자 처벌요구 /95.10.9 제41호 /164
- 장애인노점상 이덕인 사망사건의 경과 /95.12.4 제44호 /168
- 최소한의 주거권확보 위한 민간공동실천지침 마련-제2차 세계주거회의의 아시아 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96.1.17 제49호 /178
- “사인규명, 책임자 처벌” 이덕인 대책위, 담동성당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96.1.24 제50호 /183
- 택지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용인철거민 신연숙씨 사망 사건 배경 /96.2.14 제51호 /186
-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세계주거회의의민간위 /96.2.28 제52호 /188
- 주거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96.3.21 제53호 /189
- 도원동 주민 또 ‘구속-집회 행진코스 이탈 이유 /98.5.18 제97호 /348
- 도원동 폭력 축소은폐 기도-분노 속 단식투쟁 계속 /98.5.25 제98호 /352
- 노점활동 합법화 요구-노점상 4천명 집회 /98.6.15 제101호 /367
- 도원동 철거주민 연행구속 사태-전경·구청직원 합세 전원연행 후 석방, 대표는 구속 /98.8.10 제109호 /398
- 죽음으로 내모는 노점상 단속-무대책 단속 항의 노점상 분신 중태 /98.9.29 제116호 /428
- 전체세대 69% “관리비낼 돈 없다”-군산 모 영구임대아파트를 통해 본 빈곤문제 /98.12.29 제128호 /478
- 빚꽃축제 위해 강제철거 항의노점상 분신 /99.4.13 제142호 /535
- 장애인 노점상 분신 숨져-단속중지·압수품 반환 등 요구 /99.7.13 제155호 /588

## 17. 농민

-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재정요구-UR비준 강행철회, 케케묵은 이념시비 중단 /94.8.1 준비5호 /62

- 10월 27일 전북농민대회 /94.11.6 준비15호 /74
- UR국회비준 저지와 12·12 반란자 처벌을 위한 전북도민대회 /94.12.19 제2호 /88
- UR국회비준 저지와 12·12 반란주범 처벌을 위한 전북도민대회 결의문 /94.12.19 제2호 /88
- [UR반대투쟁보고와 구속자석방 촉구대회]-대전역과 각 군에서 경찰원천봉쇄로 무산 /94.12.26 제3호 /89
- UR반대투쟁 구속전북농민 전원 구속취소로 풀려나 /95.1.6 제4호 /91
-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농림수산부 국정감사자료에서 /95.9.25 제39호 /160
- 문민정부 4년 “농정” 심판-전농 전북도연맹 주최 전북농민대회 열려 /97.7.31 제73호 /251

## 18. 사회복지

- 사회보장 기본법안 실효성 의문-경실련 ‘한국사회복지개혁에 관한 심포지움/94.9.5 준비7호 /44
-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제출한 정부보고서-고령자,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의 고용확대 /95.3.6 제11호 /106
- 노령수당지급 당면 예산쟁점으로 떠올라 /96.8.7 제57호 /196
- 표준 생계비 현실적 삶과 엄청난게 동떨어져 있다-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 /97.2.27 제64호 /220
- 제1기 사회복지학교 /97.6.18 제71호 /243
- 지역 사회복지, 시민관심이 관건-‘정의평화정보센터 제1기 사회복지학교’ 결산 /97.7.7 제72호 /246
- 조례제정 연대기구 만들자-주민참여, 주민권리실현을 위한 제도 필요성 절실 /97.7.7 제72호 /246
- 노동·시민운동 “조례제정” 한 목소리-‘조례제정 시민연대’ 워크샵 가져 /97.9.19 제76호 /262
- 누구나 마음놓고 걸을 권리-시민 보행권, 기본적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98.11.2 제120호 /442
- 실직자 지원 조례(안) ‘찬밥’-재정부담이유 도의회에서 미료(未了)처리 /98.11.24 제123호 /455
- <기획연재> 김대중 정부 출범 1년 6월의 사회변화: 사회복지① 못가진 자와 연대하지 않는 정부 /99.10.19 제168호 /642

### <노인>

- 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 인권-전주시의회 반대로 전주치매병원 건립 물건너가 /98.4.27 제94호 /335
- 결국 치매병원 시직영 방침철회-전주시, 치매병원 민간위탁 결정- ‘공익성’실종 우려 /98.10.19 제118호 /435

### <동암사태>

- 생존권 담보한 인권유린-동암복지관, 구타·성폭행 등 다반사 /98.12.15 제126호 /465
- 동암, 조사특위 뜨자 시설폐지 신고-전주시의회, 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조사특위 구성 /98.12.22 제127호 /474
- 동암 진상구명 대책위 발족-“동암법인 전반 조사” - 사법조치 촉구 활동도 /98.12.29 제128호 /477

- 동암재활원 사태 일지 /98.12.29 제128호 /478
- [특별기고] 동암재활원 사태를 보면서-윤찬영 /98.12.29 제128호 /480
- <동암 공대위 기자회견>-“인권유린 사실확인” /99.1.19 제131호 /491
- 동암공대위 감사원 진정 /99.2.9 제134호 /503
- 동암비리 진정-진정서 /99.2.9 제134호 /504
- 6.25때부터 이어진 관행 여전-시특위 사회복지시설 조사활동 중간 보고 /99.2.23 제135호 /507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중간조사결과① /99.2.23 제135호 /507
- 수용자 대부분 환자-요양·치료 방치-시특위 ‘사회복지시설’조사활동 중간 보고② ;노인복지시설편 /99.3.2 제136호 /511
- “시설 나가면 부랑인”-전주시의회·특위 ‘사회복지수용시설’조사 중간보고③ : 아동복지시설편 /99.3.9 제137호 /515
- 개선책 논의-“비판은 부족”-전주시특위 활동 결산 공청회 /99.3.16 제138호 /518
- 사회복지 수용시설 ‘빙벽’깨기 첫걸음-동암 공대위, ‘수용인 복지와 인권’ 토론회 /99.3.30 제140호 /527

#### <사회복지시설>

- 폐쇄적인 운영, [시설과 공직자간의 이중적 부조리]-시설의 공개운영과 감시활동 강화 필수적 /95.8.28 제36호 /153
- “에바다 재단 약속지켜라”-공대위 등 100여명 걷기대회 /99.2.2 제133호 /499

### 19. 어린이·청소년

- 엠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침해사례 캠페인 /94.10.10 준비12호 /70
-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선언-[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95.3.20 제13호 /110
- 유아 9백 71명 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설문보고 /95.4.24 제18호 /119
- 어린이·청소년권리신장을 위한 민간보고서 완성-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95.7.10 제29호 /140
- 유엔,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최초보고서 심의 /96.1.10 제48호/176
- 어린이·청소년, 보호대상 아닌 엄연한 인격주체 /97.5.1 제68호 /235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주요내용 /97.5.1 제68호 /235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고등학교를 중심으로-배경내 /98.8.24 제111호 /408
- 청소년 인권은 어디에-‘전자우편’건 호지부지 잊혀질 듯 /98.10.12 제117호 /431
- 중고생 인권선언 제정-차별거부·결사의 자유 등 천명 /98.11.24 제123호 /455

### 20. 대학생인권

- 사제단 “박홍총장 발언은 편견과 무지”-한교협인권위, 한총련 등 “사과해명 요구” /94.7.25 준비4호 /59
-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지속적으로 광주 사회운동단체 탄압 /95.2.20 제9호 /101
- 5·3 동의대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촉구 /95.5.8 제20호 /124
- 전북지역 학생 3명 구속 /95.8.21 제35호 /152
- 조작사건에 이어 프락치사건 발생-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 강력반발 /95.9.25 제39호 /160
- 14일, 분신 경원대생 사망-대책위, 학교측의 고발·경찰 고문문제제기 /95.12.18 제46호 /172
- 고 장현구군 사건, 학생들 농성 계속-경원대학측에서는 천막 철거 /96.1.17 제49호 /179
- 성대 분신 황혜인씨 장례-유가족 시신 화장고집 /96.4.24 제55호 /193
- 여수수산대 오영권씨 장례-현정권 타도 유서남겨 /96.4.24 제55호 /193
-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 분신기도 /97.2.27 제64호 /219
- “미래 망치지 말라”-교육부, 대학신입생에 국가보안법 등 형사처벌 조항 열거 안내장 돌려 /98.2.23 제85호 /300
- 학원민주화 싸움 대학생 분신기도-총장, 원보전 학내비리폭로투쟁 ‘방화’로 호도 /98.3.2 제86호 /303
- 학생회장 매수사건 수사촉구-서남대 교수협, 관선이사과건 총장사퇴 요구 /98.3.2 제86호 /304
- 도내 사립대 분규 갈수록 심화-각 대학 학생회·교수협, 비리총장 퇴진운동 /98.3.23 제89호 /319

### 21. 여성

- 광고시간 확대는 여성상품화 가속화시킬 것-14일 민우회 성명 /94.9.26 준비9호 /66
-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주제-전국여성대회 열려 /94.10.10 준비12호 /70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 처리 “남녀 고평법” 원리 그르친다 /95.1.6 제4호 /92
- 3·8 세계여성의날 행사 및 기념식 /95.3.13 제12호 /107
- 여성장애인 공청회-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95.4.10 제16호 /116
-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박자-여성·노동계 9개단체 국회에 청원 /95.7.10 제29호 /139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제거해야-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강연에서 /95.7.24 제31호 /144
-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북경 화이러우에서 8월 30일-9월 4일까지 /95.8.28 제36호 /154
- “여성의 평등실현전략 마련성과”-한국 NGO 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의 보고회 /95.10.9 제41호 /164
- 호봉체계 성차별 문제 쟁점화-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96.2.28 제52호 /188
- “정책의 부재, 인권의 부재”-김영삼 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96.3.21 제53호 /190
- F학점 여성공약-김영삼 정부 여성공약 이행 수준미달 /97.7.7 제72호 /247
- “가정폭력=범죄행위” 법 제정돼야-제정주관 선포 등 법제정운동 본격화 /97.9.3 제75호 /260

- "가정폭력-법으로 막아야"-방지법 제정은 여성기본권 확보 차원 /97.9.19 제76호 /262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여성인권 사회문제화 위한 법기틀 마련 /97.12.8 제79호 /274
- 가정폭력방지법 7월1일 시행-이적단체, 조기정착 위해 다각 노력 /98.1.19 제81호 /286
- 구체적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은-21세기를 여는 전북 여성정책 토론회 /98.3.23 제89호 /317
- 가정에서 여성·아동폭력 처벌받는다-7월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98.6.29 제103호 /375
-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98.6.29 제103호 /375
- 여성의 쉼터 개소 /99.3.30 제140호 /527
- 새천년 여성의 자리는...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제1기 성평등 교육 여성아카데미 /99.4.6 제141호 /533
- 여성인권 걸림돌에 '박충근 성희롱 검사'-전북여성단체연합 올해의 걸림돌·디딤돌 선정 /99.7.6 제154호 /585
- 일보전진 위한 한 걸음-호주제 폐지 위한 토론회 열려 /99.9.20 제165호 /628

### <성폭력>

-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14일, 성폭력상담소 의료·심리치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94.9.26 준비9호 /66
- 전북지역 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성폭력 예방 위한 전문기관 필요' /94.11.21 준비17호 /77
-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개소식-성폭력 상담과 쉼터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 /94.11.29 준비18호 /80
- 정읍 태인여중교사 성폭행 사건-여성단체 조속해결촉구 /95.2.13 제8호 /100
- 전북 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재판중인 불출석으로 연기 /95.3.13 제12호 /108
-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의 전형-태인여중 여교사 성폭행사건 항소심 공판 시작 /95.3.27 제14호 /112
- 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9차공판-여관종업원 검찰진술서 번복 /95.4.24 제18호 /120
- 정읍태인여중교사 성폭행사건 재판연기 /95.7.17 제30호 /142
- 우조교 성희롱 사건, 원심파기 판결-박용상판사 '공정성과 도덕성 문제있다' /95.7.31 제32호 /146
- 성희롱 항소심 재판 '남성위주의 판결 재확인'-여성시민단체 평석회 및 규탄집회에서 /95.8.7 제33호 /148
- 태인중교사 성폭행사건 원심파기, 유죄선고-"성폭행 피해여성들의 인권향상 계기" /95.8.14 제34호 /150
- 김교사 성폭행사건 항소심 승소평가 토론회-"여성계의 단합된 행동의 결과" /95.10.2 제40호 /162
-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95.10.2 제40호 /162
- 『세계성폭력 추방기간』-전북여성단체, 다양한 행사 마련 /95.11.27 제43호 /166
- 성폭력피해자 권리헌장 선포-여성단체연합, '성폭력피해자 권리헌장' 선포 /98.12.1 제124호/459

## 22.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94.8.29 준비6호 /62-2
- 접근권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10일,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열려 /94.9.12 준비8호 /64-1
- 한국교회, 장애인에 대한 관심 계기되기를-KNCC 장애인위, 일본장애시설 등 방문 /94.10.10 준비10호 /68
- '1교회 1장애인고용운동 전개'-기독교 28개 교단 등 /94.10.10 준비12호 /70
-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94.12.26 제3호 /90
- 기업에게 장애인부담 감면혜택-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 장애인단체 반발 /95.2.13 제8호 /100
-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촉구-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제안집을 통해 의사반영 /95.4.17 제17호 /117
-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0.54%-장애인에 대한 편견, 고용기피 등 /95.4.24 제18호 /120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95.7.10 제29호 /140
- 제9기 장애우 대학 개척 /95.8.21 제35호 /152
- 한·일 장애인 삶의 질 현저히 낮아-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95.9.4 제37호 /155
- '중합병원'장애인 경시풍조 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요구 /95.9.18 제38호 /158
-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95.10.2 제40호 /162
- "민중 탄압 맞서 범국민대책위 만들자"-이덕인대책위 제안 /95.12.18 제46호 /171
-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장애우연구소 전국 18개 대학조사에서 밝혀/96.1.10 제48호/175
-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32인 설문조사 결과발표 /96.1.24 제50호 /184
- "장애인 고용의 실태" /96.4.24 제55호 /194
-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 주장 철회"요구-장애인 협회, 전경련 규탄집회 가져 /98.4.20 제93호 /332
- 또다시 불붙는 에바다-96년 이후 투쟁 1000일, 해결된 것 없어 /99.7.20 제156호 /592
- "정신지체인도 당당한 시민"-강제불임수술에 대한 공동성명 /99.8.24 제161호 /613
- <자료요약>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전주·군산) /99.11.9 제171호 /652

## 23. 동성애

- 동성애자들 권리선언-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결성 /95.7.3 제28호 /138
- '동성애=변태성욕'?-동성애자 인권연대, 교과서 수정요구 /99.8.10 제159호 /604

## 24. 환경

-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시위 덕적면 주민 사망! /95.1.16 제5호 /94
- 굴업도 김계월씨 가족장 /95.1.23 제6호 /96

- 시민단체들 일제히 반대표명-군산월명공원 파괴하는 (주)대우 토취장 허가계획 /95.3.20 제13호 /109
- 군산시, (주)대우 토취장 다시 물색-시민단체들 대체토취장 제의 /95.3.27 제14호 /112
- “월명공원 파괴는 절대로 안된다”-군산시,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체 토취장 부적격 판정 /95.4.3 제15호 /114
- 군산시 미룡동 토취장 전격허가-군산시민단체 강력반발 /95.4.17 제17호 /118
- 제4회 환경기행-전주 수질오염상태 심각 /95.6.12 제25호 /134
- 전남영광 핵발전소 생존권 위협 /95.10.9 제41호 /164
- 핵폐기를 매립반대 결의문 /97.2.1 제63호 /216
- 갯벌 보호구역에 양식장 축조-부안군, 곰소·줄포만 등 7~8곳 특혜의혹 /98.6.29 제103호 /374
- 군산, 전국 폐기물 처리장 될 판-환경부, PCB 실험소각 채비 /98.7.20 제106호 /386
- 새만금호 정화해도 소용없다-감사원, “제2의 시화호 전략 우려” /98.9.29 제116호 /426
- 시민의식 개선 주력할 듯-새만금간척 반대, 전북시민 대책회의 결성 /98.10.26 제119호 /438
- “새만금, 환경재앙 자초” /98.12.1 제124호 /459
- IMF이후 환경정책 퇴보-환경련, ‘전북 환경7대뉴스’선정.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1위 /98.12.15 제125호 /466
- 새만금 “최대 갯벌 파괴”-한·일 습지보전단체 ‘새만금선언’ 채택 /99.1.19 제131호 /489
- <새만금>중단 촉구-사회단체, 매주 반대 캠페인 /99.1.26 제132호 /493
- 새만금 조사단 구성하라-전북공대위, <조사단 구성위원회>제안 /99.2.9 제134호 /503
- “민간공동조사단 왜 안하나”-새만금 공대위, 공조단 구성 촉구 시민대행진 열어 /99.3.16 제138호 /519
- 철새조망대에 위락시설?-군산시민, 금강호 위락시설 반대 /99.3.16 제138호 /519
- 환경단체 “먼저 공사중단하라”-새만금 민간조사위 원칙 제안 /99.4.13 제142호 /537
- 신자유주의가 환경재앙 부른다-세계 환경의날 기념 초청강연 /99.6.8 제150호 /568
-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 /99.7.27 제157호 /597
- “전주시도 해제 반대해야”-전주권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결성 /99.8.10 제159호 /604

## 25. 북한

- 전북지역 각계인사 ‘비상시국선언’ 발표-핵문제 평화적 일괄타결, UR 국회비준 거부/94.7.1 /53
- 북한 수재민 돕기 캠페인-전북여성단체연합 한달간 /95.9.18 제38호 /158
- 기아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다 /97.4.15 제67호 /229
-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도내 북한동포돕기운동 활발 /97.5.1 제68호 /233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금석이다 /97.5.1 제68호 /236
- “모든 것 초월해 북한동포 돕자”-북한동포돕기운동 전북본부 창립 /97.5.17 제69호 /239

- 군비축소, 협력기금 증액-전북본부 1억모금 지정기탁 ‘대북지원 전담기구’설치 제안 /98.2.10 제83호 /291
- “북한동포 도움 시간 많지 않다”-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식량난민 770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98.6.1 제99호 /357
- <자료> 1999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9.6.22 제152호 /577

## 26. 주한미군

- 군산미군기지 투쟁 발전방향 나와-이장희 교수 군산평화학교 강의에서 /98.4.20 제93호 /331
- 군산, 특별법 제정운동 맞들려-〈시민토론회〉“미군기지 주변주민 지원운동 일환” /98.6.1 제99호 /355
-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초안)-전문요약 /98.6.1 제99호 /355
- “미군철수·국보법폐지”-전가대협, 미군기지 앞 집회 /98.8.17 제110호 /403
- 오사카 노동자들 금요집회 참석-“미군부대, 양국 민중에 불행의 근원” /98.11.10 제121호 /447
- 천주교사제단 미군기지 안 시위 /99.3.16 제138호 /518
- 미군기지 마을 주민 소음피해조사-군산시, 녹색연합 군산비행장 비행기소음 조사나서 /99.4.6 제141호 /533
- 미국, 학살승인 사과해야-‘반미의 날’ 군산기지 항의시위 /99.5.25 제148호 /559
- 부산서도 끈질긴 ‘우리땅 찾기’-미문화원 반환계기 시민운동 활기 /99.5.25 제148호 /559
- 군산미공군 문정현 신부 외 2명 불법연행·감금-1시간 감금, 성적모욕 등 ‘심각한 인권유린’ /99.8.10 제159호 /607
- <인터뷰> [군산미군기지 금요집회 100회 맞는 문정현 상임대표] “불평등 바로 잡는데, 치열해야...” /99.11.9 제171호 /653
- 군산미군기지 금요집회 100회-97년 시작-민항사용료에서 소파개정까지 /99.11.23 제173호 /661
- <자료> 100회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 선언문-불평등한 한미관계 지속되는 한 금요집회 계속된다 /99.11.23 제173호 /661

### <미군범죄>

- 한국경찰, 미국범죄에 대해서 허위보고와 굴욕적 태도 일관-지난 3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94.11.6 준비15호 /73
-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95.2.13 제8호 /100
-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떠잇기’ 무산-‘미국과의 외교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95.2.27 제10호 /104
- 경찰청,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 자처하는 배신행위” /95.3.6 제11호 /106
-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미군범죄 규탄 확산 /95.5.29 제23호 /130
- 미군관련 사건에 관한 최근 한국 언론보도에 대한 주한미군 대변인의 성명서 전문 /95.5.29 제23호 /130

- 조정국씨 단식농성 시작-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95.6.12 제25호 /134
- 미군범죄 발언 사과 요구-운동본부, 토론회 제안 /95.9.18 제38호 /158
- 다시 돌아보기-“주둔군 범죄에 대한 미국인의 양면성” /96.4.24 제55호 /196
- 군산미군기지 위조지폐사건 파장-미군범죄추정, 한국 김·경 수사권 행사 소극적 /98.2.16 제84호 /297
- 군산 미군기지서 또 위조지폐 발견-우리나라 형법도 ‘통화에 관한 죄’ 수사권 명시 /98.2.23 제85호 /301
- 군산미군기지시민모임, 경찰·검찰청장 고발키로-미군 위조지폐사건 관련 /98.3.2 제86호 /305
- 위조지폐피의자 수사 미군협조 촉구-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 사령관에 <공개서한>건네 /98.6.7 제100호 /361
- 군산미공군 사령관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요약)-군산 미공군 사령관 귀하 /98.6.7 제100호 /361
- 위조지폐범 “허프”를 구속하라!-「군산미군기지 시민모임」, 기지 내 세 번째 기습시위 /98.6.21 제102호 /370
- 미군차에 치여 중상-신문배달 목사, 배상 오래 끌 듯 /98.6.29 제103호 /374
- 군산, 한국인 여성 피살-미군 용의자 수사 제대로 못해 /98.9.7 제113호 /415
- 미군이 쓴 유탄 민가에-미군부대 인근마을들 사정거리 안 위치 /98.9.14 제114호 /417
- 미군범죄 해결된 것 하나없어 시민들 분노-군산시민모임, 미8공군부대장 퇴진 요구 /98.9.29 제116호 /427
- 미군 유탄폭음 임신부 조산-박순녀씨 피살사건도 해결 힘들 듯 /98.10.12 제117호 /430
- 집요한 시민행동의 성과-위조지폐범 허프에 1심에서 5년형 선고 /98.10.26 제119호 /437
- 미군범죄 석연찮은 무죄판결-사법부, 화폐위조 인정 불구 항소심의 /99.3.2 제136호 /509
- 폭음·조산 국가배상 불인정-배상심의회, 유탄발사한 미군책임 외면 /99.4.27 제144호 /544 /

#### <SOFA>

-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 /95.6.5 제24호 /132
- 공해식민지 탈출하자, SOFA 개정 절실-미군기지 환경조사 실시, 군산기지 하천오염 심각 /96.12.15 제61호 /204
- 미공군기지 공여토지 소유권 분쟁-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 /97.4.15 제67호 /232
- ‘한미행정협정, 한국민 권리 깃발아’ /98.11.24 제123호 /455
- SOFA개정 이뤄질까-홍순영 외교통상장관 ‘개정’ 촉구 /99.4.20 제143호 /539
- 군산우리땅찾기 1주년-SOFA개정투쟁 벌이기로 /99.5.11 제146호 /552
- 미군이 평화를 위협한다-25~28일, 미군기지 대응 국제회의 열려 /99.6.29 제153호 /579
- 전주교구사제단 SOFA개정투쟁 나서-미군기지 앞에서 길거리 미사 /99.7.13 제155호 /589
- 미군 공여토지 일부 ‘반환결정 환영할 만한가’-“한미행정협 개정”이 해결책 /99.8.17 제160호 /607
- SOFA 전면 개정하라-강제구금·민간인 탱크조준 규탄 /99.9.14 제164호 /625
- 소파개정 거듭 촉구-시민모임, ‘불평등 관계’ 홍장관 발언지지 /99.10.5 제166호 /632
- 소파 이젠 바꾸자-소파개정 국민행동 출범 /99.10.12 제167호 /635

- “소파 이렇게 바꾸자”-국민행동 ‘개정안’ 방향 내놔 /99.11.9 제171호 /653

#### <민항사용료>

- 미공군기지, 우리땅 거저 쓰면서 군산공항 이용료 4배 인상요구 /97.9.3 제75호 /260
- 오만한 주한미군-군산 미군, 활주로 사용료 4배 인상요구 /97.10.6 제77호 /265
- <기고> “우리땅 사용료 요구는 적반하장”-최종수 /97.10.6 제77호 /266
- 두 바퀴로 여는 평화의 날-군산민항기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 자전거타기 대회 /97.10.30 제78호 /272
- “굴욕적 협상서명 반대”-군산미군기지시민모임, 전북공대위 구성제안 서명운동 법적 대응도 병행 /98.2.10 제83호 /293
- “미군은 우리땅에서 떠나라”-전주교구사제단 군산미군기지만 기습시위 /98.3.16 제88호 /311
- 미군기지문제, 민족주권 자세 촉구-군산시민모임, 국방부에 공식요청 설명회 참가 /98.5.18 제97호 /348

#### 27. 평화·통일

- 교황청 무기생산 비난-고용유지 명분도 비도덕 /94.7.1 준비1호 /53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식출범-“민간통일운동의 구심역할 다할 것”선포 /94.7.6 준비2호 /56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 /94.7.6 준비2호 /56
- 남북정상회담 차질없이 진행돼야 /94.7.14 준비3호 /57
- 방위비삭감 연대회의-사회복지예산 증액해야 /95.7.17 제30호 /142
- 8·15 50주년 학술세미나-통일지향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 육성 /95.8.14 제34호 /150
- 방위비 삭감, 복지예산 증액 요구-방위비연대회의, 전년대비 12.5% 증액반대 /95.8.21 제35호 /151
-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촉구-민교협 성명서 발표 /95.8.21 제35호 /152
- 통일맞이 겨레사랑운동 /97.4.1 제66호 /228
- 새로운 통일운동이 필요하다-전북지역 통일행사에 대한 간략한 평가 /97.9.3 제75호 /258
- <현장의 소리> 미국방장관 코언의 ‘한국 국방비삭감반대’ 발언을 규탄한다 /98.2.3 제82호 /289
- <자료>제1회 평화학교-군산 “평화란 무엇인가?” /98.4.20 제93호 /333
- 지뢰, 군축, 그리고 평화-문정현 /98.4.27 제94호 /337
- 일상 속에서 평화만들기-최종수 /98.4.27 제94호 /337
- 북한을 생각하며 -함세웅 /98.8.31 제112호 /412-1
- 보안법 철폐·동포돕기 강조-99 통일축전 전북추진본부 결성 /99.7.27 제157호 /596

#### <대인지퇴>

- 한국사람은 죽어도 좋다?-미국무부, 대인지퇴금지조약 한반도에외 추진 /97.9.3 제75호 /257

- 마지막 냉전유물 '지뢰'를 걷어내자 /97.9.19 제76호 /264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앞뒤 /97.10.30 제78호 /269
- 남북한 정부는 하루속히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라!-대인지뢰대책회의 성명서 발표 /98.2.10 제83호 /294
- 군산에 '살상용 대인지뢰' 매설-최소 10년전 매설, 피해사례 확인안돼 주민들 불감상태 /98.3.9 제87호 /307
- 사고지역 따로없다-대인지뢰 '금지협약' 가입 서둘러야 /98.8.17 제110호 /403
- [자료] 대인지뢰 유실사고에 대한 성명 /98.8.17 제110호 /403

## 28. 기타

- 조선민족박해 규탄-작가회의, 민예총 / 94.7.1 준비1호 /53
- 조계사 농성장소로 첫 이용 /94.7.6 준비2호 /56
- 창간사 : 영원히 지켜야 할 '인권'을 생각하며 /94.12.10 창간호 /85
- 제46회 세계인권기념일 각 단체들 기념행사-전북지역에는 인권행사 없어 아쉬움 남겨 /94.12.19 제2호 /87
- 사복고한 개발촉진지구 우선지정-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 /95.3.6 제11호 /106
- 대형사고 예방은 인간중심개발로 전환되어야-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보고 /95.7.3 제28호 /137
- 동성애자들 권리선언-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결성 /95.7.3 제28호 /138
-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보여 /95.9.4 제37호 /155
-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민주노총·민교협·전국연합·환경운동연합등 8개단체 /96.2.28 제52호 /187
-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80만명 증가 /96.3.21 제53호 /189
- 국민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23일, PCS문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 /96.4.24 제55호 /192
- 복간사: 다시 문제는 인권이다!! /96.11.15 제59호 /197
- 6·10 민주정치개혁 선언-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식 전북추진위 /97.6.18 제71호 /244
- <신년사> 98년 호랑이의 해를 희망찬 인권의 해로! /98.1.5 제80호 /280
- "민주개혁과제, 이제는 공동대응하자"-전국적 지역연대운동조직 활동 기지개 /98.1.19 제81호 /284
- '세계 난민사진전' 전주에 오다-"난민법 제정" 촉구 /98.2.10 제83호 /293
- 시민단체, 선거·지방자치 참여 공개토론-"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98.3.30 제90호 /320
- 부채탕감 서명운동-가난한 10억 인구의 부채 탕감, G8정상회담에 청원서 제출 /98.3.30 제90호 /320
- 구체적인 실천 안에서 터득한다-"지령 100호를 내며"-문규현 /98.6.7 제100호 /359
- "지령1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98.6.7 제100호 /363
- 전주월드컵 시민경제 압박-유치여부, 공청회 등 시민여론 다시 들어야 /98.6.29 제103호 /373
- 사회운동 정보화 눈앞-진보네트워크, 내달부터 본격 활동 /98.7.13 제105호 /383

- "민중연대 새 희망을!"-'98민중대회 서울 여의도에서 열려 /98.11.10 제121호 /445
- 인권선언 50주년 행사 다채 /98.12.1 제124호 /457
- 명동성당, 농성단 강제 철거-'민주화 성지' 명성 먹칠 /98.12.1 제124호 /458
- 인권선언50돌 기념식 가져 /98.12.15 제126호 /465
- 도내 사회단체 '달러의혹' 규탄성명-유지사 '현금12만 달러' 비축 의혹 /99.4.20 제143호 /540
- "유지사 도민에게 사과해야"-민주노총 전북본부 성명서 발표 /99.5.4 제145호 /548
- "구조조정 반대 민중연대"-99년 1차 민중대회 15일 열려 /99.5.11 제146호 /552
- 생존권 쟁취! 민중연대-99년 1차 전북지역 민중대회 /99.5.18 제147호 /556
- 말로는 사면 몸은 탄압-김대통령 '자유메달' 수상 이후 /99.7.13 제155호 /589

## 29. 민간단체

### <경실련>

- 사회보장 기본법안 실효성 의문-경실련, '한국사회복지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94.9.5 준비7호 /64

### <국제인권단체 - 엠네스티>

-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국제엠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94.7.6 준비2호 /55
- 93년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남한 요약 /94.7.14 준비4호 /58
- AI, "조문"관련 대량구속-'표현의 자유' 침해우려 /94.7.25 준비4호 /59
- 더많은 사형집행 우려-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94.10.10 준비10호 /67
- 엠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침해사례 캠페인 /94.10.10 준비12호 /70
- 국제사면위원회(AI)조사단 활동-양심수가족 인권단체 등 방문실태조사 /94.10.24 준비13호 /72
-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95.1.6 제4호 /92
- 국제사면위,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촉구-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 요구 /95.1.30 제7호 /97
- 엠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95.1.30 제7호 /98
- 인권문제 이해 증진 목적 사진전 열어 /95.3.20 제13호 /109
- 북한, 8백-1천여명 수감 반국가사범 2백 40명-국제사면위원회, 북한방문에서 밝혀 /95.5.15 제21호 /126
- 엠네스티, 비인도적인 대우 조사촉수 /95.6.26 제27호 /136-2
- 박용길 장로·은수미씨 석방촉구-엠네스티, 박장로 양심수 선정, 긴급행동 돌입 /95.8.7 제33호 /147
- 한일 인권세미나 개최-엠네스티 한국지부 /95.8.21 제35호 /152
-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변화 안해"-씨네 총장 '국보법 개정', '준법서약제 폐지'등 촉구 /98.9.14 제114

호 /419

- 한국정부에 대한 AI 주요 권고사항 /98.9.14 제114호 /419
- <자료> 1999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9.6.22 제152호 /577
- <자료> 1999년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②대한민국 /99.6.29 제153호 /581, /582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결성돼-군산미군기지 반환위해 항구적 활동 벌이기로 /98.5.11 제96호 /343
- 위조지폐피의자 수사 미군협조 촉구-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 사령관에 <공개서한>건네 /98.6.7 제100호 /361
-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계속된다”-금요집회1년-50회 /98.12.22 제127호 /473
- 미군기지 마을 주민 소음피해조사-군산시, 녹색연합 군산비행장 비행기소음 조사나서 /99.4.6 제141호 /533
- 군산우리땅찾기 1주년-SOFA개정투쟁 벌이기로 /99.5.11 제146호 /552
- <자료>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1주년 선언문 /99.5.11 제146호 /554
- 미국, 학술승인 사과해야-‘반미의 날’ 군산기지 항의시위 /99.5.25 제148호 /559
- SOFA 전면 개정하라-강제유급·민간인 탱크조준 규탄 /99.9.14 제164호 /625
- 소파개정 거듭 촉구-시민모임, ‘불평등 관계’ 홍장관 발언지시 /99.10.5 제166호 /632
- <인터뷰> [군산미군기지 금요집회 100회 맞는 문정현 상임대표] “불평등 바로 잡는데, 치열해야...” /99.11.9 제171호 /653
- 군산미군기지 금요집회 100회-97년 시작해 민항사용료에서 소파개정까지 /99.11.23 제173호 /661
- <자료> 100회 군산미군기지 앞 금요집회 선언문-불평등한 한미관계 지속되는 한 금요집회 계속된다 /99.11.23 제173호 /661

<대한변호사협회>

- 노동자·여성·장애인 등 생존환경 개선필요-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94.10.10 준비10호 /67

<민가협>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후원을 위한 밤]-이리 2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95.1.30 제7호 /97
- 이리시민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후원을 위한 밤]-강희남목사, “실천운동으로 민족의 역사 바꿔나 가자” /95.2.13 제8호 /99
- 민가협 10차 총회-국가보안법 철폐 최대과제로 /95.3.20 제13호 /110
- 국보법 무죄판결자 증언-제84차 민가협 목요집회 /95.5.1 제19호 /122
- 민가협 목요집회 1백회-‘양심수없는 날’ 그리며 /95.8.14 제34호 /149
-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10일 전주교도소에서 /95.8.14 제34호 /150
- 일곱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민가협 창립 10주년 기념 /95.12.4 제44호 /168
- ‘국민의 정부 6개월’ 양심수 대량 양산-민가협 보고서, 보안법위반 계속 증가 /98.9.21 제115호 /421

· ‘시와 노래의 밤’ 열 돌 맞아-민가협, 양심수 고난·희망과 한길 걸어 /98.11.24 제123호 /454

<민교협>

- 민교협 교수의 인권긴급토론회-‘학문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같이 인정돼야’ /94.10.24 준비13호 /72
- “한국사회의 정신적 황폐화”-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호남사회연구회 제3회 연합토론회 /94.12.10 창간호 /86
-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촉구-민교협 성명서 발표 /95.8.21 제35호 /152
- 교수들 농성돌입-악법철폐 민주적 개정 촉구 /97.2.1 제63호 /213
- “또 하나의 불평등 협정”-민교협, 한미투자협정 반대 성명 /99.6.29 제153호 /580
- 민교협, 사제단 단식투쟁 지지선언-“국보법은 칼과 황금 지키는 폭력” /99.10.5 제166호 /632
- “인권대통령 허구”-민교협 등 국보법 폐지 촉구 /99.10.26 제169호 /645
- “국보법 폐지” 요구 확산-종교계 이어 도내 교수들 농성·143명 서명 /99.11.2 제170호 /649

<민변>

- 헌법재판소 긴급진단 “청문회거쳐 재판관 임명해야”-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94.9.5 준비7호 /63
-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95.2.27 제10호 /104
- 유엔 결정한 즉각 수용 촉구-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항의 성명 /99.2.2 제133호 /498
- “파업권 보장·정부 강경대응 철회”-민변 대정부 시국건해 발표 /99.6.1 제149호 /564
- 민변, 정간법 개정 촉구-“재벌의 언론소유 제한” 등 국회의장에 보내 /99.10.12 제167호 /636

<불교인권위원회>

-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선출-사형제도위, 노동위 등 분과신설 /94.12.26 제3호 /90
-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 재야인사구속 비난성명 /95.3.20 제13호 /110
- 7·4 공동성명발표 23주년 불교인권위 등 성명 /95.7.10 제29호 /139

<사회발전한국포럼>

- ‘사회발전 한국포럼’ 결성-사회발전 세계정상회담 대비, 매달 1회포럼 개최 /94.8.1 준비5호 /62

<사회진보연대>

- “신자유주의 반대” 사회운동체 결성-‘사회진보연대’ 창립총회 마쳐 /98.12.8 제125호 /463
- “공습 미국지지 경솔” /98.12.29 제128호 /478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비디오 시사회 /95.10.2 제40호 /162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개소식-성폭력 상담과 쉼터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 /94.11.29 준비18호 /80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운영간담회-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교육 필요 /95.4.17 제17호 /118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상담전화 개설 /95.5.8 제20호 /124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개소 2주년 기념식 치뤄 /96.11.30 제60호 /200
- 새천년 여성의 자리는...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제1기 성평등 교육 여성아카데미 /99.4.6 제141호 /533

<소파국민행동>

- 소파 이젠 바꾸자-소파개정 국민행동 출범 /99.10.12 제167호 /635
- 노근리 학살 철거규명 촉구-〈소파 국민행동〉 성명 /99.10.12 제167호 /636
- “소파 이렇게 바꾸자”-국민행동 ‘개정안’ 방향 내놔 /99.11.9 제171호 /653

<여성단체연합>

- 전북지역 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성폭력 예방 위한 전문기관 필요’ /94.11.21 준비17호 /87
- 3·8 세계여성의날 행사 및 기념식 /95.3.13 제12호 /107
- 전북여성후보정책토론회 /95.5.1 제19호 /122
- 북한 수재민 돕기 캠페인-전북여성단체연합 한달간 /95.9.18 제38호 /158
- 『세계성폭력 추방기간』-전북여성단체, 다양한 행사 마련 /95.11.27 제43호 /166
- “정책의 부재, 인권의 부재”-김영삼 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96.3.21 제53호 /190
- 여성인권 걸림돌에 ‘박충근 성희롱 검사’-전북여성단체연합 올해의 걸림돌·디딤돌 선정 /99.7.6 제154호 /585
- 일보전진 위한 한 걸음-호주제 폐지 위한 토론회 열려 /99.9.20 제165호 /628

<여성민우회>

- 광고시간 확대는 여성상품화 가속화시킬 것-14일 민우회 성명 /94.9.26 준비9호 /66

<여성의전화>

- 여성의전화 신입회장 신혜수씨 선출 /95.1.23 제6호 /96
- 94년도 아내구타 2천 1백 26건-여성의 전화 상담통계 발표 /95.3.13 제12호 /107
- 전북여성의 전화 여성학교실-[다시 생각해보는 가족법] /95.5.29 제23호 /130
- 여성의 쉼터 개소 /99.3.30 제140호 /527

<유가협>

- 의문사 유가족 진상규명 촉구 삭발 /99.4.6 제141호 /533
- “유공자 법안 폐기는 민주화운동 부정”-‘특별법 전환기도 중단’요구 시민단체 성명 /99.5.18 제147호 /561
- 이근안 정형근 등 고문범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고문피해자 기자회견-‘고문범죄 진상규명·재발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99.11.30 제174호 /664

<인권운동사랑방>

-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완료, 회의참석 /95.5.1 제19호 /121
- <소개> 인권하루소식을 아시나요? /98.3.16 제88호 /313
- 국가보안법 7조를 아십니까-인권운동사랑방, 국보법 폐지 위해 사례수집 /98.8.24 제111호 /405
- 유엔 결정한 즉각 수용 촉구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항의 성명 /99.2.2 제133호 /498

<인권운동젊은연대>

- ‘인권운동 젊은연대’ 창립 /98.8.24 제111호 /406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식출범-“민간통일운동의 구심역할 다할 것” 선포 /94.7.6 준비2호 /56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민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요구-UR비준 강행철회, 케케묵은 이념시비 중단 /94.8.1 준비5호 /62

<전국/전북연합>

-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전국연합 대의원대회 /95.2.27 제10호 /103
- 민주세력 탄압중지, 사회단체 선거참여보장 촉구-재야단체 성명발표, 지속적인 참여 주장 /95.4.10 제16호 /116
- 김주열 열사 묘소참배 /95.4.24 제18호 /120
-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95.5.8 제20호 /123
- 전북연합 5·18 주간 행사계획 /95.5.8 제20호 /124
- 전국연합 정책토론회-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필요 /95.5.22 제22호 /128
- 이총리 담화에 재야반박 /95.6.19 제26호 /136
- 삼풍붕괴사고 축소수사 비난-[전국연합] 성명서 발표 /95.7.17 제30호 /142
- 안기부법 개악저지 전북공대위 결성-공청회·시민행동의 날 행사 거행 /96.11.30 제60호 /199
- 하루빨리 조건없는 수배해제를-60여 YS시절 정치수배자 300여일 농성 /99.6.22 제152호 /576

<전북시민운동연합>

- 전북 9개 시민운동단체 연합체 결성-지역현안해결 부조리 파수꾼 /94.10.10 준비12호 /69
- 전북시민운동연합 결성-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 /94.11.21 준비17호 /78
- 전북시민운동연합 [지자체를 위한 시민토론평광장]-지역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연구 필요 /95.4.3 제15호 /113



· 전북시민운동연합 [지자체를 위한 시민토론평장]-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95.4.10 제16호 /115

#### <전북여성노동자회>

· 여성노동자 인권확보와 평등사회 수립을 위하여-전북여노회 창립식 가져 /97.5.17 제69호 /239  
· 70%가 '노동조합 필요' 응답-전북지역 미조직 여성노동자 고용현황 발표 /99.10.19 제168호 /640

#### <전북인권선교협의회>

· <창간준비 특집대담> '전북지역 인권운동의 산실'-전북인권선교협의회(KNCC)를 찾아 /94.11.21 준비17호 /78  
· 손성모씨 석방 난망-국민회의 "29년 이상 17명" 사회단체들, 석방촉구 기자회견 /99.2.9 제134호 /501  
· "김현철이 독립운동가쯤 되나"-국민회의 도지부농성 등 사면반대 행동 잇달아 /99.8.24 제161호 /611  
· "이번 국회에서 폐지를"-도내 19개 종교단체 40일 단식투쟁 돌입 /99.10.12 제167호 /635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아시아 시민사회 등의 연대를 위한 전북지역 토론회'-시민사회운동간의 교류 필요 인식제기 /95.7.17 제30호 /142  
· "교도소 답변 못믿는다"-평화와인권, 은폐의혹 다시 제기 /99.2.2 제133호 /497  
· 손성모씨 석방 난망-국민회의 "29년 이상 17명" 사회단체들, 석방촉구 기자회견 /99.2.9 제134호 /501  
· 교도소 의문사 조사단 구성 /99.3.23 제139호 /521  
· 전주교도소 조사단 방문 거절-천주교사제단·평화와인권 등 항의서만 전달 /99.3.30 제140호 /526  
· 전북 인권소식 한눈에-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홈페이지 단장 /99.6.8 제150호 /567  
· 안풀린 의문사 진상-'평화와인권' 교도소장 상대로 소송 /99.7.27 제157호 /595  
· "지문날인은 반문명 제도"-지난주 도내 첫 '지문날인 반대' 캠페인 /99.7.27 제157호 /595  
· 인권 3법 제대로 만들어야-평화와인권, 의문사특별법안 등 문제점 지적 /99.8.2 제158호 /601  
· <성명서> 세계인권선언 제51주년을 맞이하며-전쟁과 억압이 종식되는 미래를 위해 /99.12.14 제176호 /674  
· <평화와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뉴스 /99.12.21 제177호 /676, /677

#### <전주시민회>

· [강기훈 초청강연회] 전주에서 열려, 전주시민회 주최 시민들 진지한 참여-'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있고 도전하고 싸우는 사람의 몫' /94.11.14 준비16호 /75  
· 전주시민회 언론학교 /97.4.15 제67호 /231  
· '새만금 백지화 음모세력 주장' 발언 책임져야-전주시민회, 유지사 '망언' 규탄 /98.9.21 제115호 /423  
· 언론주인은 나-전주시민회, 5회 언론학교 /98.11.24 제123호 /454  
· 전주시민회 <언론학교> /99.5.4 제145호 /547

#### <정보통신연대INP>

· 정의평화정보센터 INP 결성-전자주민카드시행 반대에 대한 설명회도 가져 /97.4.1 제66호 /227  
· 아래로부터의 정보통신 한마당 /97.10.30 제78호 /272  
· "노동감시 반대!"-정보통신연대 INP 캠페인 돌입 /99.2.2 제133호 /499  
· 통합·전산화되는 주민증, 정보사회파시즘 위험-정보통신연대 INP '주민전산화' 토론회 /99.6.15 제151호 /572

#### <참교육학부모회>

· 전주 참교육학부모회 언론모니터 교육 /95.10.2 제40호 /162

#### <참여연대>

· 시민단체, 판검사 감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96.4.24 제55호 /193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 군산시민연대 출범-민주노총 시험·전교조 등 참여 /98.9.14 제114호 /419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인권위 '94연례모임' /94.10.10 준비10호 /67  
· 조작간첩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요구-천주교인권위원회 /95.3.20 제13호 /110  
·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천주교 인권위, 법무부장관 면담 /95.6.19 제26호 /136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통일염원미사 시작돼-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95.4.3 제15호 /113  
·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기도회-"양심에 기초하지 않는 실정법은 악법" /95.6.19 제26호 /136  
· 전국사제단 통일염원미사 /95.9.25 제39호 /160  
· 안기부법 개악저지 전북공대위 결성-공청회·시민행동의 날 행사 거행 /96.11.30 제60호 /199  
· 핵폐기를 매립반대 결의문 /97.2.1 제63호 /216  
· 노동법 개정의 기본정신과 쟁점에 대한 사제단의 견해 /97.3.7 제65호 /224  
· 천주교사제단, 양심수석방운동 /98.7.6 제104호 /378  
· 사제단, 양심수 집단면회 /98.12.15 제126호 /467  
· 천주교사제단 미군지기 안 시위 /99.3.16 제138호 /518  
· 교도소 의문사 조사단 구성 /99.3.23 제139호 /521  
· 전주교도소 조사단 방문 거절-천주교사제단·평화와인권 등 항의서만 전달 /99.3.30 제140호 /526  
· "현정부 총체적으로 문제"-25일, 전국사제단 성명 발표 /99.6.29 제153호 /580  
· 천주교구사제단 SOFA개정투쟁 나서-미군지기 앞에서 길거리 미사 /99.7.13 제155호 /589  
· "국가보안법 폐지"-천주교연대 전국순회투쟁 /99.8.31 제162호 /615

- 천주교 사제들 삭발단식-국보법 폐지 요구 명동성당에서 8일째 /99.9.14 제164호 /623
- <인터뷰> 삭발단식투쟁 리수현 신부 /99.9.14 제164호 /623
- '국보법 폐지' 도내 확산-사제 등 10여명 단식농성-대규모집회 /99.9.20 제165호 /627
- 더이상 침묵 않겠다-천주교 전주교구 보안법폐지 운동 선언 /99.10.5 제166호 /631

####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14일, 성폭력상담소 의료·심리치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94.9.26 준비9호 /66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대협 위안부문제 국제 중재재판소 회부 촉구-국제여론 환기위한 '민중재판'추진 /94.7.25 준비4호 /76
- "교류센터 기금안 반대"-일총리에 전후문제 해결촉구 /94.8.1 준비5호 /62
-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 위해 14-18일 일본방문 /94.9.26 준비9호 /65

#### <호남사회연구소>

- 사단법인 호남사회연구소 창립-새로운 상황에 맞는 연구활동의 활성화 시급 /95.5.8 제20호 /124
- 미국무부 "국보법 표현의 자유 침해"-호남사회연구회 '국보법의 악법성' 토론회 /99.11.23 제173호 /659

#### <환경운동연합>

- 지구의날 행사 무기한 연기 /95.4.24 제18호 /120
- 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포럼]-지역주민 정책과정 참여해야 환경문제 해결 /95.5.1 제19호 /122
- <새만금>중단 촉구-사회단체, 매주 반대 캠페인 /99.1.26 제132호 /493
- "민간공동조사단 왜 안하냐" -새만금 공대위, 공조단 구성 촉구 시민대행진 열어 /99.3.16 제138호 /519
- 환경단체 "먼저 공사중단하라"-새만금 민간조사위 원칙 제안 /99.4.13 제142호 /537
-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 /99.7.27 제157호 /597

#### <KNCC인권위원회>

-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한교협인권위,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사업 /94.11.21 준비17호 /78

#### <국제인권소식>

-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방한 /94.12.10 창간호 /86
- 평화·인권·민주주의 아태지역 네트워크 결성-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창립 /95.4.3 제15호 /114
- 일본도 노동법 개악 /98.9.7 제113호 /415
- 20% 빈국 국민 소비율 겨우 전체의 1.3%-UNDP 보고서, 세계빈부격차 심화 /98.9.14 제114호 /418
- 미군이 평화를 위협한다-25~28일, 미군기지 대응 국제회의 열려 /99.6.29 제153호 /579

- 학살 진상 규명 등 촉구-지난달 동아시아 학술심포지움 /99.12.7 제175호 /669

### 30. 인권간행물(책자/영상물)

- 노동자·여성·장애인 등 생존환경 개선필요-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94.10.10 준비10호 /67
- <책소개> 법과 인권 /97.4.1 제66호 /227
- <책소개> 인권의 역사 /97.4.15 제67호 /232
- <책소개> 나, 너, 우리 [차이의 문화를 위하여] /97.7.7 제72호 /248
- <책소개>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 /97.12.8 제79호 /276
- <책소개> 청소년 인권보고서 /98.1.5 제80호 /282
- <소개> 인권하루소식을 아시나요? /98.3.16 제88호 /313
- <책소개> 보안관찰자의 꿈 /98.3.23 제89호 /315
- <인권간행물> 열사회보-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당신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있다" /98.6.1 제99호 /357
- <인권영화> 다큐멘터리 "22일간의 고백" /98.6.21 제102호 /371
- <인권간행물> 양심수후원회-10년 동안 양심에 호소해 온 작은 햇불 /98.7.13 제105호 /381
- <인권간행물>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한 이론과 실천-윤찬영/전주대학교 출판부/1998 /98.8.10 제109호 /397
- <인권간행물> 불법도청 '합법' 감청-'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 /98.11.24 제123호 /453
- <자료> 98국정감사 자료집-새정부 감사자료 한눈에 /99.1.12 제130호 /486
- <인권간행물>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펴냄 /99.2.9 제134호 /502
- <자료:석사학위논문> 지방정부와 지방언론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새만금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조상진 /99.2.23 제135호 /506
- <새책소개> '98고용실업 정책자료집 /99.3.16 제138호 /518
- <인권간행물> 인권교육의 길잡이 /99.3.23 제139호 /521
- <인권영화> 전세계 학살자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칠레전투 /99.5.25 제148호 /556
- <인권간행물> DJ정부 1년, 국보법 보고서 /99.6.22 제152호 /576
- <인권영화> 동창회-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99.8.31 제162호 /616

### 31. 인권영화제

- 제1회 인권영화제 전북에서도 열려-조직위원회, 12월 1일부터 4일간, 전북대학교 합동강당에서 16편 상영계획 /96.11.15 제59호 /197
- 전주인권영화제 암흑 속에서 시작-인권신장의 계기, 젊은 층 관심 많아... /96.12.15 제61호 /204
- '인간의 영상'을 찾아서-제2회 인권영화제 전주·군산 2개 도시에서 개최 /97.10.30 제78호 /270
- 서울 조기종결 이서 인천서도 인권영화제 탄압 /97.10.30 제78호 /270
- 제2회 인권영화제-전주·군산 상영일정표 /97.10.30 제78호 /271
- 인권영화제, 그 후-문규현 신부, 국보법 조사받아·관객엔 관람소감 써내라 /97.12.8 제79호 /275
- 인권영화제로 뜨거웠던 겨울-전주·군산, 각계 관심속 성황리 마쳐 /97.12.8 제79호 /276
- 제3회 인권영화제 전주 주요 상영작 소개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98.11.24 제123호 /456
- "레드헌트 상영 그 뜻대로"-군산, 지난해 이어 11일부터 사흘간 인권영화제 /98.12.8 제125호 /462
- 인권침해 현장을 찍자-인권영화제 '카메라 인권지기' 공모 /99.9.20 제165호 /628
- 인권영화로 20세기 돌아본다-제4회 인권영화제-전주, 11월 27일 개막 /99.11.9 제171호 /651
- 인권영화로 돌아보는 20세기 /99.11.16 제172호 /656
- 인권영화로 돌아보는 20세기 /99.11.23 제173호 /660
- 인권영화제로 오세요 /99.11.23 제173호 /662

### 32. <인권주평>

- <인권주평> 인권선언 50주년과 우리의 현실-김승환 /98.1.19 제81호 /286
- <인권주평> 언론의 죄와 책임-리수현 /98.2.3 제82호 /290
- <인권주평> "군비축소와 평화정착만이 남한과 한반도의 살길이다."-조문의 /98.2.10 제83호 /294
- <인권주평> "탈시장화와 탈상품화를 위한 시민복지운동"-윤찬영 /98.2.16 제84호 /298
- <인권주평>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책과제"-김승환 /98.2.23 제85호 /302
- <인권주평> "언론의 양심수 증오병"-리수현 /98.3.2 제86호 /306
- <인권주평> 신정부 100대 과제속의 사회복지-윤찬영 /98.3.16 제88호 /314
- <인권주평>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개정을 보며-최종수 /98.3.23 제89호 /318
- <인권주평> 대학비리 앞에 학생이 죽어가고 있다-김승환 /98.4.6 제91호 /326
- <인권주평> 한총련에 대한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리수현 /98.4.13 제92호 /330
- <인권주평> 생산적 복지와 한풀이 복지-윤찬영 /98.4.20 제93호 /334
- <인권주평> 생산성이 아니라 삶의 가치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세상이 산다-조문의 /98.4.27 제94호 /338
- <5.18기념주평> 그 누구도 5.18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문만식 /98.5.18 제97호 /350
- <인권주평> 시대가 험악해도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윤찬영 /98.6.7 제100호 /362
- <인권주평> 자치단체장 단독출마와 유권자의 선택권-김승환 /98.6.15 제101호 /368

- <인권주평> 국민정부여 모두를 폭넓게 끌어안아라-리수현 /98.6.21 제102호 /372
- <인권주평> 파산한 나라, 무너지고 있는 지역에 월드컵 경기장 신축이라?-조문의 /98.6.29 제103호 /376
- <인권주평> 권리를 통한 권력의 분배가 가정과 사회를 인간화한다-윤찬영 /98.7.6 제104호 /380
- <인권주평> 이 지역 교육현안을 짚어본다-정인섭 /98.7.13 제105호 /384
- <인권주평>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시장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전쟁-조문의 /98.7.20 제106호 /388
- <인권주평> 양심수란 무엇인가?-김승환 /98.7.27 제107호 /392
- <인권주평>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효율-최원규 /98.8.3 제108호 /396
- <인권주평> IMF 시대의 여성노동자-박정희 /98.8.10 제109호 /400
- <인권주평> 노동자가 주장하는 경제정의-염경석 /98.8.17 제110호 /404
- <인권주평> 경제위기와 시민운동-최원규 /98.8.31 제112호 /412
- <인권주평> 언제까지 공권력은 자본의 사병역할을 할 것인가?-염경석 /98.9.21 제115호 /424
- <인권주평> 밥줄 끊고, 감옥에 보내는 세상-문정현 /98.10.19 제118호 /436
- <인권주평>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돌보는 여론을 형성하자-김금옥 /98.11.2 제120호 /444
- <인권주평>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문정현 /98.11.17 제122호 /452
- <인권주평> 도청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문제-김승환 /98.12.1 제124호 /460
- <인권주평> 인권수준-국민수준-김의수 /99.1.12 제130호 /488
- <인권주평> 98년 인권침해자-고홍석 /99.1.26 제132호 /496
- <인권주평> '정상'과 '장애' '자선가'와 '수혜자', 그 사회적 이분법을 넘어-이재천 /99.2.2 제133호 /500
- <인권주평> 노숙자, 그는 우리의 부모, 형제입니다-이희운 /99.2.23 제135호 /508
- <인권주평> 미래의 생존권이 흔들린다 :국민연금 파동에 부쳐-윤찬영 /99.3.2 제136호 /512
- <인권주평> 장기수 석방-그 역사적 의미-김의수 /99.3.9 제137호 /516
- <인권주평> 보육원의 청소년들-이재천 /99.3.16 제138호 /520
- <인권주평> 후진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정책-이희운 /99.3.30 제140호 /528
- <인권주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대하여-김의수 /99.4.6 제141호 /534
- <인권주평> 체벌, 교권의 확립인가? 인권침해인가?-윤찬영 /99.4.13 제142호 /538
- <인권주평> 피물은 만두-고홍석 /99.4.27 제144호 /546
- <인권주평> '유예된 행복' 청소년기의 운명인가-이재천 /99.5.4 제145호 /550
- <인권주평> 5·18민중항쟁과 실업자, 노숙자, 부랑인-이희운 /99.5.18 제147호 /558
- <인권주평> 배고픈 자의 생존권과 배부른 자의 재산권-윤찬영 /99.5.25 제148호 /562
- <인권주평> 종교단체-인권의 보루인가, 사각지대인가-김의수 /99.6.1 제149호 /566
- <인권주평>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시작하며-오두희 /99.6.8 제150호 /570

- <인권주평> 별레로 살다간 한 인간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 읽기-박병덕 /99.6.15 제151호 /574
- <인권주평> 신 미일안보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제정은 한반도에 대한 미일의 선전포고!-방용승 /99.6.22 제152호 /578
- <인권주평> 시장독재에 맞서 싸워야-고홍석 /99.7.6 제154호 /586
- <인권주평> 김대중씨가 자유메달을 받았다?-리수현 /99.7.13 제155호 /590
- <인권주평> 인권과 복지에 대한 신창원의 역설-윤찬영 /99.7.27 제157호 /598
- <인권주평> 외국인 노동자, 3중의 착취대상-이희운 /99.8.2 제158호 /602
- <인권주평> 자연 태풍과 사회 태풍-김의수 /99.8.10 제159호 /606
- <인권주평> 일본은 21세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가-이재천 /99.8.31 제162호 /618

### 33. 특별기고

- <특별기고> 밝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97.5.17 제69호 /240
- <특별기고> 법률안 날치기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①-김승환 /97.7.31 제73호 /252
- <특별기고> 법률안 날치기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②-김승환 /97.8.8 제74호 /256
- <독자기고> OPPA, 랩 안에 담긴 사회안식-그러나 “들리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98.2.10 제83호 /291
- <특별기고>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 군산의 대인지뢰를 없애자!!-조문의 /98.3.9 제87호 /310
- <특별기고> IMF시대 인권과 '저항의 연대'-오두희 /98.3.30 제90호 /322
- <특별기고> 문규현 신부는 무죄다-김승환 /98.9.7 제113호 /416
- <특별기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자리 매김-김승환 /98.10.12 제117호 /432
- <특별기고> 동암재활원 사태를 보면서-윤찬영 /98.12.29 제128호 /480
- <신년기고> 스스로가 희망이 되면 무엇이 두려울까?-조문의 /99.1.5 제129호 /484
- <특별기고> 조성만열사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며-고홍석 /99.3.23 제139호 /524
- <특별기고> 인권유린 장본인이 인권유린을 감시한다-홍근수 /99.3.30 제140호 /529, 530
- <특별기고> 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려워하는가?-김승환 /99.4.20 제143호 /542
- <특별기고> '건강권' 말하기 부담스러운 사회-서소영 /99.6.1 제149호 /564
- <조작간첩 양심수 이화춘씨 옥중편지> “감옥 사정 달라진 게 없다” /99.7.20 제156호 /594
- <특별기고>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묻자-문정현 /99.8.17 제160호 /610
- <특별기고> 시민사회단체의 친관료적 명사화를 우려한다-이재천 /99.9.7 제163호 /612
- <특별기고> 민족화해를 원하는가?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을 철폐하라-홍근수 /99.9.20 제165호 /630
- <특별기고> 시민세력의 확장과 지역주의 극복-김의수 /99.10.26 제169호 /646

- <특별기고> 집시법시행령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전준형 /99.11.2 제170호 /650
- <특별기고> '실업'과 실업 단체의 딜레마-탈출을 위한 비판-이창석 /99.11.9 제171호 /654
- <특별기고> 군산지역 빈민(운동)은?-백상현 /99.11.16 제172호 /658
- <특별기고> 너나없이 할 수 있는 참 좋은 일-이재천 /99.11.30 제174호 /666
- <특별기고> 황당한 경험, 집회신고에서 '각서'까지!-이창석 /99.12.7 제175호 /670
- <특별기고> 부업은 일하는 것이 아니다-박미란 /99.12.21 제177호 /678

##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

**전** 북평화와인권연대는 모든 사람이 평등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특히 전북지역 인권침해의 파수꾼으로 활동하고자 노력하는 인권운동단체입니다(전북 전주 소재).

**전** 북평화와인권연대는 1994년 12월 10일 「정의평화정보센터」로 출발하여, 전북지역 인권소식지 「평화와인권」을 창간하고 양심수석방운동·국가보안법철폐운동·전자주민카드지공대위·인권영화제에 참가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해오면서 지난 1998년 2월 현재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로 탈바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매주 인권신문을 발행합니다.**
  - 주간 전북지역 인권신문 「평화와 인권」 발행
  - 지역 인권 사안에 대한 정확한 보도
- **체계적인 인권자료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권 관련 자료들의 관리
  - 인권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 **인권과 평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 교육 활동
  - 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활동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와 피해자 구제활동
  -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질러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

- **생활인권운동**
  - 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혁 활동에 참여
  -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확충을 촉구하는 활동
- **구속자 지원사업**
  -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장기수·양심수들을 후원 및 석방운동
  - 행정법 개정운동 등 구금자 권리보호운동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대운동**
  -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 **평화와 자결권 실현 운동**
  - 한반도 평화와 민족 자결권 실현을 위한 활동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참가
- **사상탄압법 폐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폐지운동
- **프라이버시권 보호운동**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활동
- **연대사업**
  -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
  -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 **해마다 인권영화제를 개최합니다.**
  - 96년부터 99년까지 네 차례 인권영화제를 공동 주관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아래 계좌로 5천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입금해주시면 후원회원이 되실수 있습니다. 후원회원께는 <평화와인권>을 보내드리고 단체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필요로 하실 경우 제공해드립니다.

**예금주 : 문규현**  
**국민은행 512-21-0065-982**  
**우체국 402297-0062450**  
**전북은행 535-21-0304454**

###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력이나 이익집단의 운동이 아닌 자치·연대운동
- 다양한 상호교류·개방적 연대를 통한 실질적인 인권활동
- 인권과 평화의 신장을 위해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문적 활동가 양성